협동연구총서 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김수암
이 석 안혜영 윤여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 쇄 2004년 11월
발 행 2004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5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등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협동연구총서 ; 04-07)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42-X

342.158-KDC4
323.623-DDC21 CIP200400197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개 국책연구기관과 4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03년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응 단계별, 지원분야별, 세부집단별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를 세부사안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원의 내용들의 연구체계상 단계별, 지원주체,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실무자,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문제점: 집단별 특성

가.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입국한 이후 고등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초기에 이들이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일반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첫째, 학업능력 부진으로 인해 국내입국 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인해 국내 입국 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 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2~3학년을 낮추어 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남한청소년들과 생활하게 되면 이들과 동류의식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 및 심리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나. 여성

북한이탈여성들이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인 적응상 어려움에 더하여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남녀관계와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정착하게 될 경우에는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취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남성이 기존의 가부장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심각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 및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남녀관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적응상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셋째, 결혼하여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교육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부모 스스로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느라 자녀교육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북한에서와 같은 방식의 생활태도를 자녀에게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영유아를 둔 경우에는 양육부담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

라 만성적인 여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이 장기간 영양부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보건문화적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 여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노인

북한이탈노인들은 다른 어느 연령집단보다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취업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고, 일반노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노인은 일상생활장애 등 건강약화문제, 의료비부담의 가중, 건강보호의 어려움 등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인구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이탈노인들이 병으로 간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5명 중 1명 꼴로는 현재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적응기간과 관련해보면 전반적인 적응기간, 직업훈련기간, 언어사용, 대인관계, 소외, 좌절, 외로움 등의 극복 등에 있어서 대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탈북노인의 경우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탈북노인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북한이탈주민 사회지원체계 개선방안

가. 지역단위 지원체계 강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 증가와 이들의 실질적 사회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제의 보완과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지역담당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혹은 사회복지과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임명되어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내의 신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고용안정센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거주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체계가 원래 목표하던 바와 같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다른 업무에 부차적인 업무로 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임담당관제를 통한 인력확보 및 양성과 함께 예산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업무의 총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관련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업무들을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정착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도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조사와 취적 및 주거지 배정 및 기초 법률지원을 토대로 지방단위의 지역정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단위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이들의 가치 및 개성 존중, 자율권 존중, 수용 자세 등 전문적 가치를 갖고 사회복지 상담기법(개별화된 조언,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현행 사회복지체계상 각 기초자치단체내에 북한이탈주민 전담 사회복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담사회복지사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담복지사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공식적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 원조관계망에서 가용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와 원조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각 개인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기존 사회복지체계 활용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 개설보다는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착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후에는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기본골격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비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 지급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노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자립을 유도하며 자활하여 시장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도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자활지원체계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도 취업을 통한 자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232개소의 자활후견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자활프로그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조건부과를 보다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구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건부과를 유예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엄격하게 실시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조건부과가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장기적으로는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착금은 생활안전비용, 취업지원비용 및 주거비용으로 대별한다. 생활비용에는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생활비지원을 의미하고 이것은 현재의 월최저임금 기준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월최저생계비로 산정하여 정착금의 규모를 줄여나간다. 궁극적으로 정착금을 초기생활안정비용(30%)과 취업지원비용(70%)으로 대별하고, 취업관련 모든 비용(정착장려금인 직업훈련, 자격취득 및 취업보호지원비 등)을 취업지원비용으로 통합 관리한다. 정착금의 잔여 예산을 취업지원비용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세대별로 1인에 대해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원하여 취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취업지원비용에서 충당한다. 기타 유망기업창설과 장사 등은 은행대출을 장려한다.

마. 통합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현행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단계별 지원체계가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 및 지역정착단계의 지원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지원이 하나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거주지정착단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거주지 정착단계에서 민간단체를 정착도우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인 정착도우미제도는 거주지 편입시 신병 인수부터 초기 정착을 위한 제반 안내, 편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사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민간단체지원의 효율성 제고

하나원 교육과 사회진출 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민간단체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역할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괄적인 연계시스템의 기본방향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수립하되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단위 단체와 지역단위 단체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생활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을 연계하는 상담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하에 사회진출 후 실질적인 지원역할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지역차원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에 상담센터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차원의 상담센터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단위의 상담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과 지역에 종사하는 상담담당자들의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 1

Ⅱ.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문제점 및 집단별 특성 ····· 7

1. 적응상 문제점 ····· 9
2. 집단별 특성 ····· 21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현황 및 활용실태 ····· 41

1. 단계별 지원체계 검토 ····· 43
2. 지원분야별 지원체계 검토 ····· 56
3. 주체별 지원체계 검토 ····· 96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 ····· 119

1. 기본방향 ····· 121
2. 세부방안 ····· 125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183

참고문헌 ····· 187

부록: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성과 목록 ····· 190

표 목 차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실태 ····· 9
<표 Ⅲ-1> 하나원 시설 현황 ····· 46
<표 Ⅲ-2> 하나원 교육 현황 ····· 46
<표 Ⅲ-3>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 47
<표 Ⅲ-4>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현황 ····· 48
<표 Ⅲ-5> 지역정착 지원수준 현황 ····· 50
<표 Ⅲ-6> 2004년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현황 ····· 58
<표 Ⅲ-7>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수급권 제공을 위한 최저 소득 인정액 ····· 58
<표 Ⅲ-8> 북한이탈주민 재정지원 현황, 1996-2002 ····· 60
<표 Ⅲ-9>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령 북한이탈주민 비중 ····· 61
<표 Ⅲ-10>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만족도 및 효율성 평가 ····· 64
<표 Ⅲ-11> 한국생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 65
<표 Ⅲ-12>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률 현황 ····· 66
<표 Ⅲ-13> 북한이탈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의 보호 내용별 비교 ····· 67
<표 Ⅲ-14> 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와 그 추정치, 1996-2007 ·· 69
<표 Ⅲ-15> 북한이탈주민 소득에 대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 ····· 76
<표 Ⅲ-16> 해외 가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 사용 의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82
<표 Ⅲ-17> 소득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 ····· 84

<표 Ⅲ-18> 우리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 적응도 평가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87
<표 Ⅲ-19> 거주지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 ····· 109
<표 Ⅲ-20> 미국과 한국의 지원시스템 비교 ····· 112
<표 Ⅲ-21>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 114
<표 Ⅳ-1>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민간 공모 사업 평가기준 ····· 137

그림목차

<그림 Ⅲ-1> 북한이탈주민 단계별 지원체계 ····· 43
<그림 Ⅲ-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정착 지원체계 ····· 49
<그림 Ⅲ-3> 북한 및 제3국 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수입 사용 의지 ····· 67
<그림 Ⅳ-1> 북한이탈주민 경제지원체계의 성과와 비용 ····· 148
<그림 Ⅳ-2> 정착지원체계의 성과와 비용으로 본 과제 ····· 149

I

서 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수많은 북한주민이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왔다. 이러한 탈북사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왔다. 현재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으로의 귀환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국내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28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2004년에도 동남아 체류 북한이탈주민 468명이 집단입국 하는 등 입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탈북연령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2003년 입국자의 경우 10세 미만 46명(4%), 10대 161명(12.6%), 20대 345명(26.9%), 30대 447명(34.9%), 50대 57명(4%), 60대 이상 65명(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 지원체계도 개별집단의 특성에 맞게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3년도의 경우 여성이 813명으로 전체 입국자(1,281명)의 63.4%를 차지하였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력으로 입국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입국과 관련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체류기간 중 인신매매, 동거를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입국으로 인해 상대남성이나 자녀들의 추가입국시도와 같은 가족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2003년도의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를 토대로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적 통일인프

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03년에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관련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의 결과 현행 정부 지원정책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생활보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서 머물러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초기 지원을 거쳐 우리 사회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개인의 자립의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착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조항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보호담당관(신변, 거주지, 취업)들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03년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응 단계별, 지원분야별, 세부집단별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를 세부사안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원 내용들의 연구체계상 단계별, 지원주체,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지원 내용이 다른 틀에서 재논의되기도 한다.

또한 세부집단별(청소년, 여성, 노인) 적응 실태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보다 집단별로 세분화·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실

무자,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지원체계의 경우 법적・제도적 차원의 틀은 상당부분 정비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거주지 정착단계에서 분야별(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보호담당관이 지원업무를 맡게 되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한 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정착지원센터(하나원)의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적응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단계의 사회지원구조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및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여 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 설문조사방법,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활용하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집단토론회, 지역협의회별 관련민간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다양한 전공영역(정치학, 경제학, 여성학) 연구자들과 외부의 전문학자들(사회복지학, 정치학)이 협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책의 보완 및 개정에 주요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II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문제점 및 집단별 특성

1. 적응상 문제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바, 사회적응에서 어려운 점을 경제적・물질적 측면과 정신적・심리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남한 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실태

(단위: %)

2001년 전우택・윤덕용		2003년 통일연구원		2004년 하나원	
- 경제적 어려움	18.3	- 외로움・고독감	18.9	- 직업능력부족	10.2
- 취업・직장생활	12.4	- 건강문제	15.5	- 외로움	9.2
- 외로움	11.7	- 경제적 어려움	14.4	- 남한사회에 대한 무지	5.8
- 남한사람의 편견	11.5	-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	12.4	- 재북가족 걱정	5.3
- 언어	8.2	- 여가 공간 부족	4.3	- 건강문제	4.9
- 문화	5.7	- 가족 돌보기	4.0	- 경제적 어려움	2.9
- 남한사회 이해 부족	4.3	-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	1.1	- 교육문제	2.4
- 재북가족 걱정	3.4	- 특별한 문제 없음	23.5	- 결혼문제	2.4
				- 차별대우	1.5
				- 문제없다	2.9

출처: (1) 전우택・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보고」(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12). (2)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통일연구원, 2003. 12). (3) 하나원 (2004. 5)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등 정서적・심리적인 문제점 등이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거론하는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나 본인들의 직업능력 부족 등은 취업과 관련되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에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취업과 월 수입문제와 관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영일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남한으로 입국한 168명의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무직상태가 39.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회사원(19.6%), 기타(13.7%)의 순서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월 평균 수입을 보고한 107명의 응답자 중 평균수입은 7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전체 응답자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168명 가운데 36.3%가 자신의 수입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1]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은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전우택・윤덕용 조사에 의하면 무직이 27.5%, 입국 후 2년 내 수입이 평균 98만 원(이 중 40% 이상이 8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통일연구원의 조사는 무직이 41.5%, 회사원이 11.8%, 자영업이 5.2%, 기타가 20.6%로 나타나고 있고, 월평균 수입에서 50만 원 이하가 41.3%, 51만~100만 원이 45.6%로 100만 원 이하 수입이 86.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적한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취업보호로 고용장려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고용제 같은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2004년 하나원 조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직업(회사에 정식 취업)이 있다가 13.6%,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이 40.9%, 장사가 4.9%, 그리고 기타가 36.9%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로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비율이 무직이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월수입과 관련, 수입이 없는 경우가 13.1%, 50만 원 이하가 11.2%, 50만~70만원이 28.6%, 그리고 71만~100만 원 이하가 17.5%로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총 70.4%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

[1]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 『2003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동계 심포지움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2003. 12), p. 7.

[2]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209.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거나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고비용 저효율을 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노동 시장의 신축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과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서 취업과 경제문제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나아가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동화를 촉진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적·심리적인 통합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취업과 조직생활을 통해서 외로움 등 정서적·심리적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동료들과 잘 어울림으로써 남한사회로의 동화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 취업률 부진

(1) 통일연구원 2003년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의 어려움이 사회적응 과정상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도 본연구진의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0명 중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41.5%나 된다. 학생(18.7%)을 제외하면,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39.8%에 불과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직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4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직의 비율이 1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부산 63.8%, 대구 45.8%, 인천 57.7% 등)의 경우, 무직비율이 높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취업률이 높아진다. 서울은 평균 무직비율보다 낮아 취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지역(수도권)은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무직비율 32.9%)이며

회사원으로 취직하는 비율(20%)도 강원(23%), 경남(21%)과 함께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능력부족'(23.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16.5%), '정부의 취업알선 부족'(11.8%) 등을 지적하였다.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신의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전문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대학 학력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1~2년인 경우에는 직업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데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정착 초기 1~2년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기다가, 2년이 지나면 '나이'와 같은 다른 변수를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이유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적기 때문'이라는 '나이'변수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취업자 가운데는 정규직(36.1%)에 비해 비정규직(5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 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의 비슷한 분포를 이룬 반면, 30대 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취업형태는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은 정규직이 많은 반면, 고등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들은 비정규직 취업자가 많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능력부족'(31.9%)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22.5%), '취업난'(20.9%)을 꼽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졸학력자의 경우는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중학교 학력자나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자신들의 비정규직의 이유를 '능력부족' '취업난' 등으로 응답한 반면, 대학교 학력자들은 '차별대우'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한국거주 기간이 1~2년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정규직 원인을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나,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취업난', '생계보호비 수급을 위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처음 1~2년 동안은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들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남한사회의 취업난 때문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변함을 보여준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한국에 온 경우는 비정규직 취업 원인을 '취업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가족의 일부 또는 친구・친척과 함께 왔거나 단독으로 온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보호비 수급'을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았으며, 독신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능력부족'을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정부나 민간단체의 도움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노력으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68.2%가 외부의 도움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힘으로 직장을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취업했다는 사람들은 53.4%이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취업한 경우는 14.8%로 취업자의 68.2%가 스스로 직장

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알선해준 외부기관으로는 신변보호담당경찰(9.8%), 노동부 고용안정센터(7.6%), 종교기관(4.9%), 통일부(3.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안내하는 여러 기관과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하는 길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인 것 같다.

그러나 신변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이유 중에서 '주위의 권유(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가 91명(42.7%)으로 가장 많고, '취업보호제(고용유지지원금)때문'에가 57명(26.9%), 그리고 '인력난 때문'으로가 38명(17.9%)이었다. 신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주위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반면, 취업보호담당관의 절대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 때문'(71%)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취업보호제를 활용하여 취업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직한 경우는 24.4%에 불과하였으며, 75.6%는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데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부족'(24.4%)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14.4%), '급여취약' 10.4%), '출퇴근 문제'(7.2%)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8.8%나 된다. 현재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15.6%)과 다소 만족(26.4%)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애로사항이 없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58.1%)이 받은 사람(41.9%)보다 많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과 대구, 울산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과 대구, 울산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각각 55.5%, 57.1%, 54.5%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5.3%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27.4%)에 비해 많았다.

희망하는 직업훈련은 정보처리・컴퓨터가 19.3%로 가장 많았고, 미용・요리(18.1%), 기계・금속(10.3%), 전기・전자(9.6%), 의료・보건(9.3%), 서비스(7.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래의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3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15.7%), 생산・기술직(14.4%), 사무직(6.3%) 등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래성'(34.2%), '임금・수입'(23.8%), '적성'(17.9%), '안정성'(12.3%), '사회적 인정'(1.2%) 등이었다. 직업선택의 기준은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0대는 '사회적 인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반면, 20대, 30대, 40대는 '장래성'을, 50대 이상은 '임금・수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직업선택에서 대학 학력자는 '적성'(25.2%), '장래성'(25.2%)의 요인들을 중시한 반면, 전문학교 이하 학력자는 '장래성'(26.6%), '임금・수입'(17.8%), '적성'(11.0%) 등의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생활 경험이 1년 이하로 짧은 사람들은 '임금・수입'에 응답한 사람이 많고, 2년 이상된 사람들은 임금이나 수입보다는 '장래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2) 하나원 2004년 실태조사

취업실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식취업과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항목에 따라 응답하고 있어, 설문의 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식 취업의 경우는 1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은 44.2%~46.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3] 남성의 취업률(15.4%)이 여성(11.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정식 취업율은 30대(18.8%), 20대(15.3%), 40대(10.0%) 순으로 나타나며, 50대 이상은 정식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반면 50대는 일용직인 경우가 63.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율을 활용하였다.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67.4%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이직율의 경우는 1번(40.7%), 3번(24.4%), 2번(21.5%), 4번 이상(13.3%)으로 파악되었다. 직장을 옮긴 사유로는 보수가 적어서(26.2%), 취향이 맞지 않아서(12.6%), 회사 직원과의 마찰(7.8%),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9.7%)로 나타났으며, 기초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4%에 그치고 있다.

취업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36.2%), 보수(30.2%), 본인의 발전가능성 여부(23.5%) 순으로 응답하였다. 취업 희망분야는 대기업 일반회사(27.9%), 취업만 된다면 상관없다(23.0%), 중소기업 일반회사(18.8%), 공무원(18.2%), 공사 및 국영기업체(6.7%), 술집, 노래방, 음식점 등 서비스분야(5.5%)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 직종은 기술직이 38.7%로 가장 높고, 사무직, 자영업이 각각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용직 6.0%, 서비스직 2.4% 순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경험은 55.0%가 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훈련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이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20.6%를 차지하고, 자격증 취득이 어려웠다는 경우가 18.6%, 어떤 직종을 배워야 할지 몰랐다가 14.7%로 나타나, 실제 교육의 내용과 분야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89.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77.4%가 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면담결과에 따르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였다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이후 북한과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시킨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지원금을 통해 취업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자신의 임금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계보호보다는 취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며, 아직 자신의 판단에도 취업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보호제의 기간 연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나. 가족의 신변불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확인을 하고자 한다. 가족들의 신변불안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입국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90.4%)가 가족들의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입국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본인의 정착금으로 후지불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송금하는데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담당관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85명(40.1%)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52명(24.5%)이 민간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39명(18.4%)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보호담당관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지율(29.1%)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22명, 40.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대와 담당 경험이 4~5년 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본인들도 사회적응에 문제가 많은데 가족까지 데려 오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적 편견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편견이 사회적응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3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에 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51.4%가 '무관심'하다고 답하였으며, '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41.0%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보통'46.1%포함).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23.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9.6%)보다 남자(13.7%)가 더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소 찬성 등 긍정적 응답이 32.9%, 다소 반대 등 부정적 응답이 30.6%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비율 구성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표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5%로 상당수가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들이 약간 더 무시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력별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의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거주 1년 이하의 응답자는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년 이상 외국생활자는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신으로 입국한 경우 무시당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가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여 출신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출신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0.7%, '말투가 달라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5.6%)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이상 4년 이하 거주자의 경우 '북한에서 왔기 때문' 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3년 이상 4년 이하를 제외하면 '북한출신이기 때문에'편견을 당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7.6%를 차지하여 2순위 이유로 꼽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한인의 편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의 차이 극복보다는 '북한출신'이라는 편견의 극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또 하나의 심각한 지역갈등의 요소라고 생각된다. 단독으로 입국한 응답자의 경우 '북한에서 왔기 때문' 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변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좋게 생각한다는 긍정적 인식이 51.5%인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4.4%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변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26.7%), '불쌍하게 생각한다'(14.1%), '무시한다'(9.7%),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18.4%), '귀찮게 생각한다'(6.8%), '죄인

으로 취급한다'(1.9%)고 인식하고 있다.[4]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2003)[5]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애를 느낀다'는 비율이 58%, '별감정이 없다'는 21.7%,'이방인 같이 느껴진다'가 12.9%, '적대감이 느껴진다'의 경우 5.5%,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9%로 나타난다. 성별 응답비율을 보면, 남성(61.7%)의 경우 여성(54.2%)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32.5%)이라는 평가가 부정적(2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수(40.7%)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태도에 대한 설문에는 '돕겠다'는 응답이 49.5%, '관계기관 통보'가 40.5%,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1%,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경우가 4.9%로 나타난다. 남성(57.8%)이 여성(41%)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라. 결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결혼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혼자, 가족 동거자 보다 독신자, 미혼자가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대의 선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 27.8%, '북한이탈주민' 28.4%, '출신지역이 상관없다'가 27.3%라고 답변하고 있다.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 결혼 상대 선택에서는 남한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출신과 결혼을 하고자 할 경우, 주위 가족들의 반대,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의 차이 등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

[4] 한 설문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우선순위는 표시되지 않았다.
[5] 전국단위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2. 집단별 특성

가.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 입국한 이후 고등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착초기에 이들이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에 더하여 새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은 대부분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새로운 남한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최소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도 남한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진학이나 학업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들이 남한에 오기 전에 기대한 것도 학업기회이며, 실제 정착과정에서 교육보호(교육비 지원 및 특례입학)의 수혜대상자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학업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업과정에서 상당한 부담과 고민을 갖게 된다. 근로능력에 대한 고민도 학업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비교적 남한주민들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리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는 이들 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 본인들과 연령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남측 청소년들을 학교 현장에서 접하게 된다. 또한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 체격은 왜소하나 정신적으로는 남한청소년에 비해 성숙하기 때문에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또래의 남한 청소년에게 마음을 터놓기 보다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가족이나 탈북동료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도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상대로서 같은 처지의 북한출신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러한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학업능력 부진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무리이다.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학제차이(북한소학교 과정 4년제로 인해 2년의 학력격차)로 인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6학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고등중학교 5학년 중퇴인 경우에는 소학교 4학년과 고등중학교 4학년 등 총 8년 학력을 인정하여 남측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을 중퇴한 경우에는 1년 차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입국 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 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체발육 부진으로 인해 본인들의 연령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취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도 있다. 2002년 서울시 4개구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12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학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52명중 27명(51.9%)이 정규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력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학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규 학교교육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미취학상태(7명, 5.5%)나 검정고시 준비(20명, 15.7%)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주된 상담 내용은 학업 및 부모 문제와 '살기 막막함'에 대한 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6]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과정을 겪음으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말해도 학력수준은 남한의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 경우가 많다.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운데다 외래어의 사용 등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해 더욱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객관식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검정고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세계사나 국사를 어려워한다. "북한에서 세계사는 아프리카, 아세아, 유럽 등 지구 표면적인거 이야기 해주지 그 나라 역사를 안 배운다. 더욱이 고등중학교 5학년부터 세계사 배우는데, 난 4학년까지만 다녀 세계사를 안 배워 아예 생소하다."[7] 이와 같은 역사교육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목이나,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학교 취학의 경우와 달리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당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학력이 인정되나, 검정고시에서는 전 과목을 합격해야 해당학교 학력이 인정된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학원수강과 함께 개별적인 학습지도(과

---

[6]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면담, 통일연구원. 2003. 3. 25.
[7] 북한이탈청소년 고○영과의 면담, 2003. 10. 10.

외)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늘푸른학교나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학업공백을 보충하여야 하며 자기통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교우관계

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감당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2~3학년을 낮추어 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이어린 남한청소년들과 생활하게 되면 이들과 동류의식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출신에 대해 매우 높은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끼리 응집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 달리 한번 모일 계기가 있으면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거의 다 출석하여 왔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보다는 나이 많은 직장인 혹은 주부들과 같이 공부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도 하나 또래집단과 같은 교우관계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늘푸른학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보였고, 교사들이 볼 때도 이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았으나 돌아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기네끼리 놀고 장난한다,” “재수 없다”는 등 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8]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의

[8] 통일연구원에서 자원봉사자 인터뷰, 2003. 3. 25.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동네 깡패와 싸움을 벌인 후에 "남한 애들은 잘 먹어 맷집이 좋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애'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열등감과 이질감을 안고 있다.

(3) 정체성의 혼란 및 심리적 어려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와 같이 입국이후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며, 피부알레르기나 구상탈모증,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건강했는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국이후 신변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 당시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꾸 눈물이 난다"거나, 여학생의 경우 손에 십자모양의 칼집을 내는 형태로 자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9]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온 보름에서 첫 달은 이전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결연하나 두어 달 지나면서 해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남한사회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심리적 갈등이 고조・심화되면서 사소한일이라도 자극이 올 때 억눌렀던 스트레스를 크게 터뜨리게 된다. 주된 문제 발생은 폭력이었고, 주로 남학생들에 의한 것이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퇴소이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영구임대

[9]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통일연구원. 2003. 3. 25.

주택은 보호기간 이후에 배정 받게 된다. 대부분 기숙사시설을 갖춘 대안학교(현재 '늘푸른학교', '마자렐로 센터', '돈보스꼬 센터', '지구촌고등학교' 등)에서 생활하게 되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 보호단체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탈하여 20세가 되어 주택을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떠돌게 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가 30여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23~24세까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한명에게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장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으며, 중국 체류기간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남녀가 혼숙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와 같이 입국한 경우에도 10대 후반의 경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정의 경우 엄마는 폐렴에 걸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엄마가 아들한테 겁먹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단체의 경우 교육생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여학생들은 모두 산부인과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여성

2003년에 실시한 조사결과[10]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여성의 90%이상이 고등중학교(현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다수가 고등중학교 졸업자이다. 이는 북한의 11년 무상의무교육제에

[10]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따른 결과라 하겠다. 북한이탈여성의 절반이상은 미혼상태이며 60%이상이 북한, 또는 제3국에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가족이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70%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나 제3국에 두고 온 가족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와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종교를 통해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은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독서 등을 하며 주로 실내에서 여가를 즐기는 편이며, 운동, 여행, 쇼핑 등과 같은 외부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특히 텔레비전 시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 이는 곧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해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이 외부보다는 실내(주로 자신들의 집)에서 여가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내지 동화에 있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현재의 한국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입국 당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신변불안 해소' 등을 가장 기대하였던 바, 이와 관련해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현재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들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기혼 및 가족과 동거하는 북한이탈여성들보다 미혼 및 독신의 북한이탈여성들이 더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불만족이 나아가 탈북 후 한국사회에 편입된 것에 대한 회의 내지 남한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입국 당시 한국사회에 대해 너무 막연한 기대를 했거나, 사선을 넘어 온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다고 느낀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입국 후 수년이 지나도 기대했던 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거나, 점차 자신 또는 자녀의 교육 및 사회진출문제, 결혼문제 등에 당면하게 되면서 한국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과 하나원 교육 및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독신 입국 여성들의 별도시설(분원) 교육에 대해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취업알선 및 취업보호, 생계비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낮지 않으며, 이는 곧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보호담당관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해 호의적·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하나원 퇴소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일대일의 관계에서 잦은 접촉 및 대화를 통해 일상적인 일에 직접적·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쓴 데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11]

---

[11] 한 설문조사에서 보호경찰관(신변보호담당관)이 자신이 담당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방법은 인간적 접근(53.4%), 잦은 대화와 접촉의 시도(16.7%), 애로사항 해결(직장 및 병원소개, 자원봉사자 연결 등)(11.1%), 남한 적응교육(9.9%), 경제적 도움(경찰관이 직접 자신의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족들의 신변확인', '물질적 풍요', '자녀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독, 또는 남편을 따라 탈북, 입국한 여성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가를 크게 염려하며 정착금 및 수입을 두고 온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60세 이상 및 무학력의 북한이탈여성과 6년 이상의 외국생활을 한 북한이탈여성, 그리고 북한이나 제3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 소수만이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 사회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겨 두고 온 가족들의 신변안전 여부를 크게 걱정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러나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정착금 및 수입의 상당부분을 사용한다면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해 자녀교육을 비교적 낮은 비율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은 기본적인 자녀교육 관련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들은 남북한의 이질적 교육체계, 교과과정, 교육내용 등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며 최근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녀교육의 의의 내지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워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우선 자신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바빠 자녀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정신적 여유도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있어 특히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자녀교육의 어려움뿐

돈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지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우택 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 39.

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북한이탈여성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해 남한여성들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여성은 말하기를 북한에서의 자녀교육은 "교과서 읽고 숙제하고 자습으로 끝나는데 한국 부모는 쓸데없는 자금을 투자하고 지나친 과외부담을 주고 해서 걱정"인 바, "한국도 북한처럼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12]고 하며 한국사회의 자녀교육 과열 현상을 비판한다.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상의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된다.

(1) 경제적 어려움

북한이탈여성의 취업률, 취업형태, 취업경로, 직종, 월평균 수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조사결과들을 통해 보면 북한이탈여성 대부분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이하이며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북한이탈여성들의 낮은 월평균 수입은 그들의 대부분이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또는 강연이나 일용직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도 취업형태와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수가 비정규직에 속해있으며 북한이탈여성의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취업경로와 관련해서 보면 북한이탈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 있어 북한이탈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관련 조사결과들에서 북한이탈여성의 다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담당경찰의 소개, 통일부의 직업알선, 종교기관의 추천 등과 같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보호제를 활용하여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

[12] 김○숙, 2004. 6. 15 면담.

(2) 건강문제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히 기본적으로 부인과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임신・출산 관련 병원에 관한 정보 내지 지식이 부족하여 건강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이 크며, 치과 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사실상 관련 연구조사결과들에 의하면 분당 하나원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3~4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으며, 대개는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요통 및 디스크, 관절염, 긴장성 두통, 변비, 방광염, B형 간염 등의 질환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생리불순 및 생리통과 같은 부인과적 증상들을 호소하며, 질염, 골반염 등의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질환 외에도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 및 중국 체류 기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불면증, 지속적 피로감과 두통, 식욕 및 노동의욕 저하, 지속적 긴장, 과도한 피해의식 등이 그것이며, 이 외에도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 또는 제3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남한 내 무연고, 또는 사회연계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한 외로움・소외감・고립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다수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만성적 기아, 가족의 아사 및 질병사, 가족해체, 인신매매 및 성폭행 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탈북 이전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체류 기간에도 공안의 추적 및 체포・송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외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서 조선족 및 중국인과 결혼했던 여성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에서 겪은 남편이나 시댁식구들

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해 정신적 외상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3)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며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남한주민들의 냉대와 편견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으며 사고방식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조사결과들을 통해 보면 북한이탈여성들은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관심 및 태도가 자신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한주민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며,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특히 자신들이 쓰는 말과 억양을 남한주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에 매우 당혹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주민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무시로 느껴진다고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남한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우며 남한주민들의 의식적인 과도한 동정, 지나친 관심, 호기심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한다.

(4) 언어문제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남한의 이질적 언어이다. 언어사용 및 대인관계, 소외감・좌절감・외로움 등은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

[13]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참조.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며, 특히 언어는 나머지 두 요인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테면 북한이탈여성이 언어의 이질화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이로 인해 남한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곧 소외감 내지 좌절감을 초래하여 북한이탈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언어문제는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과 관련해서도 심각성을 더하는 바,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이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네 가지 요인 외에도 가족단위로 탈북, 입국한 기혼의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남편의 잦은 구타라고 토로한다. 그들은 북한에서도 남편의 구타가 잦았으며, 한국에 정착한 후로도 남편의 구타행위가 지속되는 바, 북한에 비해 여성을 존중하는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구타는 참아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한국사회 적응에도 장애가 된다고 말한다.[14] 사실상 가족단위로 탈북,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를 고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남편과 딸과의 갈등 내지 불화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가 없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적극 고려하는 편이며 이러한 추세가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상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한 그들은 특히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라는 내부적

[14]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동등한 위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 60.

요인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요인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노력 없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이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등과 같은 자책성의 내부적 요인을 지적한다. 사실상 위에서 살펴 본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 언어문제, 가족간 갈등 등의 요인은 북한이탈여성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감을 형성, 강화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할 때,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북한이탈여성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도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은 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자격지심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이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존여비적 관점에서의 여성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된 자격지심의 발로라고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다. 노인

한국의 노인인구가 2003년도에 이미 8%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노인의 문제가 생활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특히 노인계층의 증가추세가 갖는 의미는 복합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특성과 한국사회 내에서 노인이 갖는 문제를 동시에 갖게 되면서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과 대응정책에 관한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중 노인세대(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연령계층)중심의 적응상황 파악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세부적 대응방안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들의 적응상황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주요 문제점과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일반적 조건에서의 어려움

일반적 사항을 보면 탈북노인 계층은 연령은 높은데 반해 학력은 낮아 실제적인 자립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높았으나 1/3정도는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계층의 단독세대와는 의미가 달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대응한 지원도 다각도로 필요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탈북노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명 중 1명꼴로는 간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제3국 및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나타나 신이산가족의 과제와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취업, 직업훈련, 결혼 등의 변수를 볼 수 있는데 노인은 이러한 영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남한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2) 경제적 문제

가장 현실적인 노인문제는 경제력과 관련된 것이다. 경제활동 인구 층에서 벗어난 노인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빈곤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심각해 질 수 있다. 특히 남한사회가 IMF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로 경제력 상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 및 기술적 낙후에 따른 취업제한은 수입의 감소와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노인계층의 보편적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며, 실제로 남한 65세 이상 노인의 56%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조사되었으며 국가적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노인계층의 객관적 적응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월평균수입은 약 74만 원정도로 전체 평균소득 약 90만 원보다 적었으며 이는 50대보다 60대(약 60만 원 정도)가 더 적어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95%로 대다수였으며, 이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자활근로의 경우도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경우를 보면 34%정도만이 취업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은 13%정도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직종의 형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분포가 높아 경제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적절한 적응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취업, 직업훈련, 결혼 등의 변수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 모두 나이가 든 계층에는 불리한 것으로 분포되어졌다. 즉 직업이 없는 경우가 거의 70%를 육박하며, 80%이상이 스스로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경우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통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적합한 자립연계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요인으로는 취업보호, 생계비지원, 임대주택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는 특히 생계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 연령별 특화된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3) 건강의 문제

탈북노인계층에 있어서 경제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문제와 더불어 병든 노인에 대한 가

족의 보살핌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된다. 탈북노인의 건강상태는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노화의 일환으로 신체적 기관이 전반적으로 퇴화하게 되며 신경통, 관절염,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매, 우울증, 파킨슨,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한 질병이 없다 해도 일상생활 수행에 꼭 필요한 6개 동작 ADL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상당수이다. 노인 계층의 사회적 진출 또한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를 요구받고 있고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 및 노력이 수반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탈북노인의 건강문제는 일상생활장애 등 건강약화문제, 의료비부담의 가중, 건강보호의 어려움 등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건강약화문제(일상생활 장애, 거동불능)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인구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대단히 나쁜 상태에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인에게 만성질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이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② 의료비 부담의 과중

경제적 문제와 연관 되지만 의료보험 이용자 통계에 의하면 노인의 연간 1일당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거의 2배가 되고, 1건당 진료비도 비 노인층의 약 2배가 되고 있다.

③ 간호 보호의 어려움

탈북노인들 5명 중 1명 꼴로는 현재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것이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를 요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자신이 간호보호를 받거나 가족들이 노인을 간호・보호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설령 앞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응할 만큼 많이 생긴다고 해도 노인의 간호・보호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 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서비스(예를 들어, 간병인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 등)의 미비 등으로 건강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④ 사회적응 및 동화의 문제

탈북노인의 적응도와 관련해서보면 전체적인 한국생활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분포되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만족보다는 보통이하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국사회의 적응기간과 관련해보면 전반적인 적응기간, 직업훈련기간, 언어사용, 대인관계, 소외, 좌절, 외로움 등의 극복 등에 있어서 대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탈북노인의 경우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다음은 사회적 동화와 관련된 적응도를 볼 때 이웃 및 직장동료와 어울리는 분포는 비교적 높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이웃과의 교류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동화의 방법으로 종교적 활동을 72%정도가 하고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를 갖고 있었다. 즉, 50대 이상 계층의 객관적 적응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적응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기본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계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교류 등이 원활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응과정에서의 부적응 요인으로는 사회적 편견, 가족의 신변불안,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두고 온 가족 등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특히 두고 온 가족의 신변불안은 남한사회 부적응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지원보다 사회적 관계 및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장기적 적응을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적응에 도움이 되는 주체는 정부의 지원과 교육을 들고 있고, 민간의 역할은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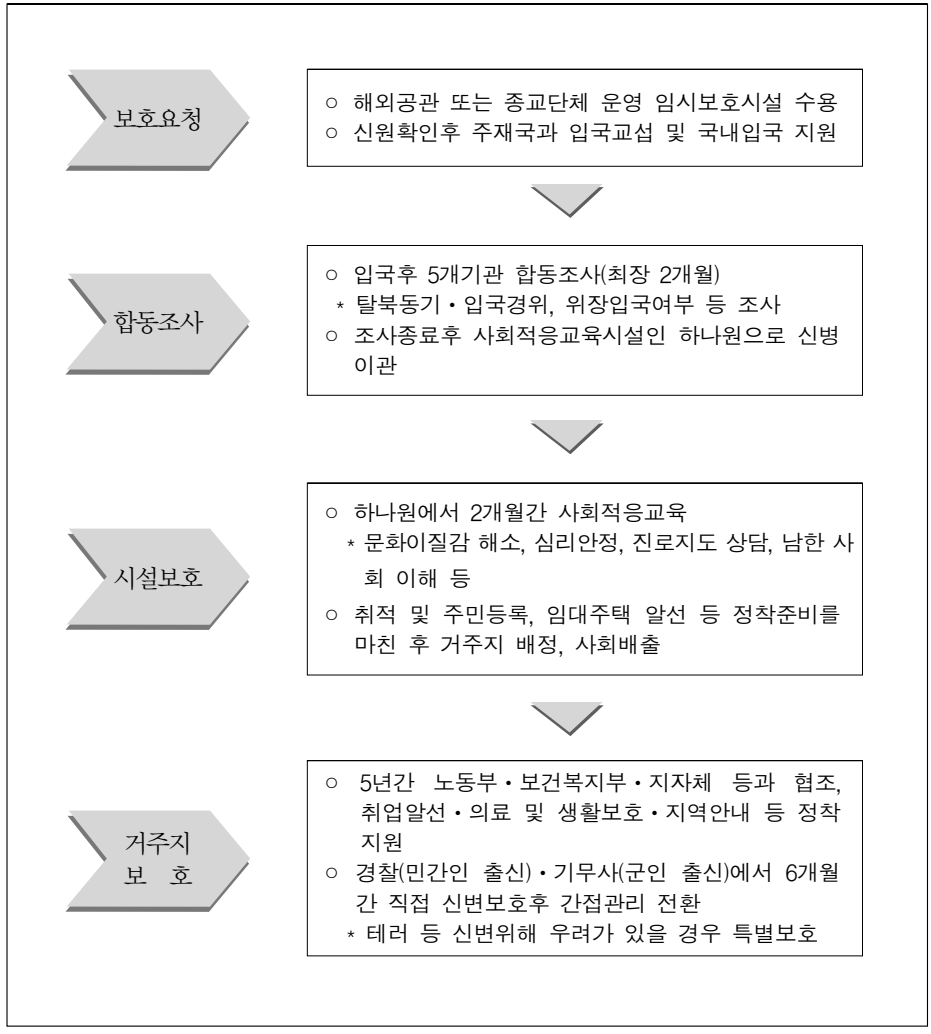
하나원 교육에 있어서는 약 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하나원 생활의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가장 불만스러운 요소는 기술교육미비, 강의식 교육방법 등을 들고 있다. 민간자원봉사 및 종교활동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하나원형태의 교육기관은 95%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는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보호 및 취업보호 담당관의 경우 불만족 분포가 크게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연령별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III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현황 및 활용실태

1. 단계별 지원체계 검토

<그림 Ⅲ-1> 북한이탈주민 단계별 지원체계



가. 정착지원시설(하나원)내 지원체계

(1) 정착지원시설의 목표와 기능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5개 기관 합동조사를 마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착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12월 30일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개소하였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 7월 하나원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03년 준공하였으며, 2002년 9월 30일 성남의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여성전용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의 법적 설립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이며,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법률 시행령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의 주요 목표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위의 법규는 정착지원시설[15]의 주요 기능으로 거주지 전출시까지 신변보호,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검진 실시, 본적·가족관계·경력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 관리 및 보존,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15] 정착지원시설은 통일부장관이 설치 운영하지만,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 지원시설 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 등 운영, 정착지원시설내 직업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기관의 주요 기능을 첫째,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둘째,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셋째,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넷째,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로 밝히고 있다.[16] 하나원은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과(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지원기관・단체 협조), 생활지도과(북한이탈주민 취적・주민등록 및 거주지 편입 지원, 진로・취업・진학 지도, 생활지도・상담, 건강・의료관리, 정착실태 조사・분석), 관리후생과(후생지원 사무, 서무・경리, 청사관리, 경비・방호 등)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업무와 기능은 하나원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의 업무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종합, 정착지원금, 직업훈련, 주거・취업알선, 생활・의료보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당 부분이 하나원과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정책 수립과 종합조정 기능은 사회문화교류국이 담당하고 있다.

(2) 정착지원시설의 인력, 시설, 교육생 현황

하나원의 2004년 7월 현재 근무 인원은 61명이다. 그 중 본원은 50명으로써 소장, 교육팀 6명, 생활지도과 9명, 관리후생과 17명, 그리고 비정규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원은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 중 사무관 이상은 7명이며, 비정규직에는 공중보건의 5명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중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인원은 청소년 교육(하나둘 학교)을 담당하는 교사 5명과 전임강사 3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상임연구위원[17] 2명, 그리고 기타 4명이다. 이것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실시되고 있

[16] http://www.unikorea.go.kr/(검색일: 2004. 7. 3.)

는 교육과 생활상담은 주로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1> 하나원 시설 현황

시설명	규 모	시 설 내 역
본 관	약 1,235평	○ 행정지원실, 회의실, 종교활동실, 강당, 건강관리실, 하나둘학교, 식당 등
교육관	약 704평	○ 강의실, 분임토의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교육 공간
제1생활관	약 701평	○ 1인실, 2인실, 4인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
제2생활관	약 541평	○ 4인실 생활공간(여성·아동 전용공간)
분 원	약 1,026평	○ 강의실, 실습실, 숙소 등(3인용 38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 개원 당시 100명 수용능력이었으나, 이후 증축과 분원 운영을 통하여 현재는 동시 400명, 연간 2,400명 수용이 가능하다. 하나원의 시설은 본관과 교육관, 제1, 2생활관, 그리고 경비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활동실과 상담실, 기초직업훈련 시설, 그리고 최근 개소한 하나의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생활관은 가족실과 1~4인 공동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생활관은 여성·아동 전용공간으로 이용된다. 하나원 분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성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여성 입국자의 증가로 본원에도 여성 단신입국자가 생활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은 2004년 8월 현재 4,580명이 입소하여 3,980명이 수료하였으며, 599명이 교육중에 있다.

<표 Ⅲ-2> 하나원 교육 현황

(단위: 명)

구 분	'99	'00	'01	'02	'03	'04.1-8.	합 계
입 소	61	297	572	1,111	1,175	1,364	4,580
수 료	60*	297	572	1,111	1,175	765	3,980
교육중	-	-	-	-	-	599	599

* 1999년 1명은 교육 중 사고사

[17] 상임연구위원은 하나원 수료생 출신이며, 주로 교육생의 생활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3) 정착지원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2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받고, 하나원 퇴소 후 각 지역에 분산되어 정착하고 있다. 하나원이 실시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하였다. 하나원 교육의 목적은 민주사회의 생활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과 자립·자활 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시민상 확립이다.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3개월 과정으로서 실시되었으나, 현행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8주 307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12%(37시간), 한국사회의 이해 및 문화충격 해소 48%(147시간),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24%(73시간), 초기 정착지원 16%(50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사회 이해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19%)을 포함하고 있다.

<표 Ⅲ-3>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심리안정·정서순화 교육(12%, 37시간)	인성·적성 검사를 통한 개별 심리상태 파악 및 애로 사항 해소, 정례적인 종교활동 등 정서순화 교육 실시
한국사회의 이해·문화충격 해소 (48%, 147시간)	남한사회 전 분야의 이해증진을 위한 이론교육·현장학습, 우리 사회 부적응 사례(언어, 대인관계, 예절 등) 집중교육 문화탐방·구매체험·봉사활동 등 현장감 있는 열린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기초직업교육·훈련 (24%, 73시간)	전산, 운전이론, 의·식생활 교육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기능훈련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
초기 정착지원 (16%, 50시간)	취적,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별 임대아파트 알선 등

현재 하나원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분리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여성, 청소년, 일반 성인 등 교육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특별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은 하나원내 '하나둘 학교'에서 8주 동안 전임 강사와 내부 강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통하여 남한 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능력 제고와 동료 그룹의 문화 학습을 받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가족과 동반 입국하지 않은 교육생들은 성남에 운영

되고 있는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차별화, 특성화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하나원 교육생들은 주말과 휴일의 경우에는 민간단체, 특히 종교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2004년 10월 이후 교육기간과 교육내용이 개선될 예정이다. 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취학을 연계하고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기초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게 된다.

나.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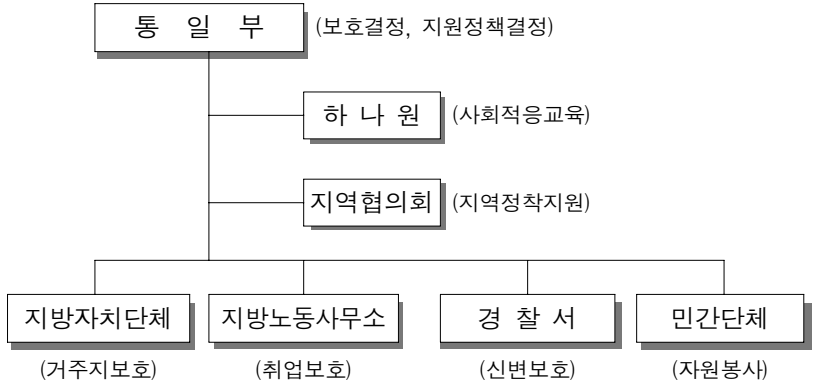
<표 Ⅲ-4>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지원현황

보호 단계	시설보호	거주지 편입	거주지보호(5년)	사후지원
지원 목표	우리 사회 기본적 이해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	초기 생활안정 지원	자립·자활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주요 지원 내용	○ 신문·조사를 통한 보호결정 ○ 사회적응교육 (2~3개월) ○ 심리상담·진로 지도 ○ 생활관리·지도 * 하나원 민간단체 참여 확대	○ 정착금 등 재정적 지원 ○ 주택알선 ○ 자매결연 지원 ○ 학력인정 및 편·입학지원 ○ 자격·경력인정	○ 특별생계보조금 지원 ○ 직업훈련 지원 ○ 교육지원 ○ 의료보호 ○ 생활보호 ○ 생업지원 ○ 거주지신변보호	○ 변동사항 파악 ○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상담·창업·결연 등) ○ 자매결연 ○ 장학사업 ○ 상담사업
지원 주체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대성공사) 자원봉사단체 등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단계를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기입국 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로 나누고 있다.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는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수료 후 배정된 거주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초기 이주시 주거지원 및 정착금 지급(통일부), 일반 행정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지원(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신변보호(경찰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정착체계는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정착 지원체계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취업보호제 실시, 노령연금의 특례 인정 제도, 생업지원제도 도입,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활성화 등이다.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Ⅲ-5> 지역정착 지원수준 현황

(2004년 기준)

지원종류	기 준	금 액
정 착 금	- 최저임금(월 567,260원)의 160배 범위 안에서 지급	- 1인 가족 : 2,836만원 - 4인 가족 : 5,502만원
임대주택	-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2인 가족 : 754만원 - 4인 가족 : 964만원 (*지역별 차이 발생)
생 계 비	- 입국 후 5년간 지원	- 1인 가족 : 월 536,910원 - 4인 가족 : 월 1,056,160원
교 육	- 고등학교는 25세 미만, 대학은 35세 미만으로 학업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인자	- 중·고 및 대학학비 전액지원 (사립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50% 부담)
직업훈련 및 취업	- 입국 후 5년 이내에 훈련시 직업 훈련비 전액지원, 고용업체에 2년간 임금보조	- 고용 후 1년간 월 50만원, 1년 이후 1년간 월 70만원으로 변경 (2004. 4부터)
의료급여	- 월 일정소득(1인 가족 59만원, 4인 가족 116만원) 미만의 경우 의료급여	

거주지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는 지역단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신변보호, 지방자치단체별 애로사항 해소, 편입학 지원 및 교육보호 실시, 정착실태 파악과 생계곤란 지원, 후원회 및 민간단체 결연 등을 통한 지원 사업을 행한다.

통일부는 1999년 5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14호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변, 취업,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사회복지관, 종교·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2001년부터 조직되어 2004년 6월 현재 서울 6개 지역(강남, 강서, 양천, 노원, 송파, 중랑)과 지방 7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

응 프로그램 운용,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입국자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는 제도적으로 완비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부족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재이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담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나원 개소 이전 시기 민간의 참여는 단지 거주지보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거주지에서의 다양한 연계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도 폭넓은 민간의 지원 및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 지원 및 봉사활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지원활동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다. 평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1999년 개소 이후 5년 간 4,500여명에 달하는 교육생에게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적응교육과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착지원시설은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지원시설의 위치 선정의 문제점이다. 현재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의 농촌지역 야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되는

폐쇄식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시설 종사자와 외부 강사진, 자원봉사자의 접근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산업체와 문화탐방 등 외부 활동의 섭외와 이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과 통제된 생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치선정과 통제된 운영방식은 신변안전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지만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 정착지원시설의 시설운용의 문제이다. 현재 하나원은 본원의 증축 이후에도 본원과 분원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년 3,000명 이상의 입국자 발생 시 수용능력이 초과되는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게 된다. 또한 본원과 분원의 분리 운영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교육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운용 방식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규모 예측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입국자 규모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시설운용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정착지원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보 문제이다. 현재 하나원은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회적응교육이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의 교육과 생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최근에 충원된 전임강사 3명과 하나원 수료생 출신의 상임연구위원 2명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 전문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다. 또한 직업안내와 심리안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 전문인력은 2~3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 교육생의 비율이 60~7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과 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위치와 교육시설 여건, 인력상황, 교육생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전문직업훈련, 개방형 강의, 교육생별 특성화, 다양한 참여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문화된 선택적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교육 시설과 교육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착지원 업무의 분담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주무부서는 통일부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 하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후관리의 일부 기능은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 분담은 각 기능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지만 정책개발과 적응교육, 그리고 사후관리가 분리됨으로서 효율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상호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정착지원시설의 성격 규정의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하나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되어 있으나, 하나원은 보호기능, 사회적응교육 뿐만 아니라 취적, 주택배정과 같은 초기 정착지원과 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하나원의 기능과 본질적인 성격규정의 문제로 나타난다. 하나원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시설로 규정할 경우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하여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교육센터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책개발과 사회적응교육, 정책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부여할 경우 종합적인 정착지원 센터가 되어야 하며, 사후관리와 정책개발, 관리자 교육 및 연수시설의 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통일대비 자료축적 및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현재 5년 간의 하나원 운영은 담당자의 개인적 경험 축적 이외에 종합적인 자료 축적과 심층분석, 그리고 연구기능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착지원 시설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살펴볼 때 특히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대응성의 행정이념에 주목하게 된다.

먼저 정착지원시설의 효과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평가는 60~80% 이상이 만족한다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18]. 그러나 정착지원시설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탈주민과 자원봉사자, 하나원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근무자, 그리고 보호담당자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착지원시설의 효과성은 정책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자와 집행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평가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은 효율성이다. 정착지원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별 예산액과 집행액, 담당인력의 업무분담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인력의 전문성 수준, 분원과 본원의 시설 건립 및 유지비용, 전임강사 확보 비율과 강의담당 비율,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집행의 평가, 시설경비 비용, 그리고 각 교육 프로그램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피상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운영은 분원과 본원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력 배치와 활용에 문제를 갖고 있으며, 분원 임대비용의 과다지출, 전문인력 확충 미비와 신분불안, 외부 전문인력과 자원인력의 접근 장애, 직업교육 시설 미비, 남녀 분리교육 어려움, 보수교육 프로그램 미비, 정착지원과와 하나원의 업무 역할분담 애로 등으로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의 운영과 유지 수준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준은 국가유공자, 기초생계보호대상

---

[18] 1993년 이후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2003년 실시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하나원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3%(매우 긍정적 31.9%, 다소 긍정적 31.1%)로써 부정적 응답자 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이다는 응답도 27.2%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성의 제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원이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나원 생활이 남한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8.2%(많은 도움 57.5%, 약간 도움 20.7%)로써 그렇지 않다는 응답 4.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p. 27~28.

자, 귀환 납북자, 사할린귀국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과 지원 서비스 수준이 확대될 경우 유사 정책대상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대응성 문제를 갖고 있다. 2000년 전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규모의 증대와 함께 가족단위 입국, 여성 증가, 청소년 증가, 그리고 입국 배경 변화 등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의 수용능력과 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전문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대응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착지원시설 운영 방식은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연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시설보호를 받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시기와 거주지 정착단계로 나누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퇴소 후 자신의 희망과 임대아파트 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착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정착지원 체계는 하나원 교육과 지역정착 후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지원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와 특성의 변화, 정부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하나원 시설보호단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정착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화, 대규모 입국시 대응성 확보, 민간자원 동원 용이성, 전문인력과 경험 축적 제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원분야별 지원체계 검토

가. 경제적 지원체계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먼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구성과 실적 그리고 특징들을 알아보고, 현행 체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세 가지 기본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가설 검증함으로써, 현행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본 논의는 이제까지의 문헌자료 이외에도 두 가지의 설문조사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하나는 2003년 통일연구원이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78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같은 기관이 우리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통일 여론조사 자료이다. 두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가설 검증 과정에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지원체계의 현황: 구성과 실적 그리고 특징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구성과 실적 그리고 특징들을 검토한다.

(가) 구성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유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유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편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고유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체계를 살펴보자.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9년 개정)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와 취업알선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액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가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 범위 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표 Ⅲ-6> 참조),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 범위 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19]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취업을 보호·장려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할 경우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에서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활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일정액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용지원금(임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취업 후 1년까지는 월 최고 50만원, 1년부터 2년까지는 월 최고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공공시설 내의 편의사업(매점 등)에 대한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생업보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

[19] 18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 1인 월최저 임금액의 7배(397만원), 2인 14배(794만원), 장애 4~5급 이상 또는 입원 1년 이상은 7배(397만원), 장애 1~3급 이상은 15배(850만원) 등 (통일부 정착지원과 2004. 5. 17)

<표 Ⅲ-6> 2004년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1] 현황

(단위: 원)

가족수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50배 (28,363,000)	13평 (7,540,000)	35,903,000
2인	67배 (38,006,420)	13평 (7,540,000)	45,546,420
3인	82배 (46,515,320)	15평 (8,950,000)	55,105,320
4인	97배 (55,024,220)	17평 (9,640,000)	64,664,220
5인	112배 (63,533,120)	19평 (10,690,000)	74,223,120
6인	112배 (63,533,120)	21평 (11,740,000)	75,273,120
7인	112배 (63,533,120)	23평 (12,790,000)	76,323,120
8인	112배 (63,533,120)	25평 (13,840,000)	77,373,120

[1]월 최저임금 567,260원의 배수로 결정.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2004.5.17)

<표 Ⅲ-7>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수급권 제공을 위한 최저 소득 인정액

(단위: 만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60	83	105	119	135	추가 가구원 1인당 15만원씩 증가
의료보호	73	100	126	143	162	추가 가구원 1인당 18만원씩 증가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2004. 4.)

그 밖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장비 등의 가치에 따라 보로금(상한선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거나, 이들의 지방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서울 인근도시 및 직할시는 주거지원금의 40%,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70%)을 지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보호 및 취업알선 목적 이외의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이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사회복지체계

에 편입함으로써 다양한 부가적 자금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이 특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에 의한 생계비 지원의 대상이 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는 달리 소득인정기준과 월 지급액에서 1인의 경우에도 2인에 해당하는 기준 즉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동일한 논거에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수급권자가 된다 (<표 Ⅲ-7> 참조).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기관에 편·입학할 경우 이들은 자동적으로 교육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교육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국·공립학교에 편·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입학금과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들의 입학금과 기성회비, 수업료의 50%가 면제되고, 나머지 50%는 해당 학교가 통일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교육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종교단체, 구호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부금, 지원금, (강연, 설문조사 등을 위한) 활동자금 등을 공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

(나) 실적

앞서와 같은 경제적 지원체계로 인해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1996~2002년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한 지원금의 규모는 총 487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표 Ⅲ-8> 참조). 그런데 이러한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 기본정착금 용도로 지출된 자금의 규모

는 총 330억 원에 달해, 전체 지원자금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역시 전체 지원자금의 23%에 해당하는 11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용도의 지원자금을 합치면 전체 지원자금의 85%에 육박하며, 이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지원자금 거의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 생활보호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Ⅲ-8> 북한이탈주민 재정지원 현황, 1996~2002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년도	기본 정착금*		보로금		주거 지원		사립대 공납금 학자금		직업 훈련 수당		고용 지원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96	50	417	11	802	50	401	55 51	106 7				
'97.7.13 이전	33	227	5	115	33	131	54 27	58 1				
'97.7.14 이후	66	418	15	880	66	455	61 7	59 0.3		19		
'98	61	416	8	250	61	414	72 23	142 2	50	32		
'99	87	1,749	11	394	87	639	70 28	138 2	91	110		
'00	223	3,972	12	229	223	1,091	81 27	170 2	96	138	105	273
'01	549	9,435	11	284	549	3,241	97 21	192 2	217	149	251	999
'02	1,029	13,438	14	75	1,029	5,460	102 21	233 2	494	430	350	1,127
합계	2,098	30,075	87	3,030	2,098	11,183	797	1,121	948	879	706	2,400

* 1993.12.17~1997.7까지 보건복지부, 1997.7.14이후 통일부에서 담당
* 정착금에는 중증장애자 지원금 포함

출처: 통일부 (2002. 12)

<표 Ⅲ-9>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령 북한이탈주민 비중

통일부 집계 (2002.12)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2003)*			국민 전체 (2001)		
총인원	해당 인원	%	총인원	해당 응답자	%	총인구	해당인구	%
2396	1811	75.6	708	676	95.5	47.3백만	1.4백만	3.0

*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 결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현재 받고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거나 이제까지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주의를 요함.

출처: 통일부 (2002. 12)와 2003년 통일연구원 설문조사자료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기존 복지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추가적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 현재 77.4%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이와 유사한 규모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의료급여법이 정한 무료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고, 재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자금 지원 역시 1996~2002년간 1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집계(aggregate)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인력들이 관찰하고 있듯이 이들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규모 역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특징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매우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자금의 규모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검토해

[20] 2004년 박찬숙의원 발표 국정감사 자료, 2004. 10. 5.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보호에 크게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1996~2002년간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한 자금의 85%가 이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출되었다. 반면 이들의 취업・교육과 같은 사회적응을 위해 지출된 자금의 규모는 전체의 15%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에 편입해 받게 되는 혜택 또한 생계비 지급이나 무료 의료서비스 같은 생활보호 차원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들이다. 이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활보호와 함께, 아니 그보다 더욱, 이들의 사회적응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많은 동독이주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이나 상당수의 해외 유대인 이주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정책의 초점은, 집단 거주시설 등에서의 단기간에 걸친 이주민 초기 생활보호가 끝나면, 거의 모두가 이들의 취업・창업・교육과 같은 사회적응에 맞추어져 있었다.[21]

둘째, 우리의 지원체계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무상자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무상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무상 자금 지원 규모는 연방정부가 1인당 200마르크(10만원 상당), 주정부가 1인당 15~30마르크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추가적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은행융자와 같은 간접적 지원방식에 의존했지 결코 재정에 의한 직접적 무상지원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사정은 매우 비슷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해외 이주 유대인들에게 직접

---

[21] 독일과 이스라엘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최보선(1997. 2), 윤인진(1999), 국회 외교통상위원회(1998. 10; 2002. 9)를 참조.

지급한 무상자금의 규모는 소액의 용돈 정도에 불과했다.

셋째, 우리의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전방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자금지원이나 주거수단 제공에서부터 의료, 취업, 교육, 미능력자의 생업지원 대책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이주자들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전방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러한 전방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매우 강고한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2) 현행 지원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삶의 분야에 걸쳐 일정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 체계는 그 특성상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현 체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도록 한다.

(가) 성과

현행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생활에서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현행 지원체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현 체계의 성과를 우회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정부의 지원 수준과 지원 형태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설문에 응답한 770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0%가 넘는 460명(60%)이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지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명(13%)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정부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이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었던 요인 한가지만을 꼽아 보라'는 질문에 대해 40%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정부의 지원'이라고 답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대해 '본인의 노력'이라고 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체의 27%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표 Ⅲ-10>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만족도 및 효율성 평가 (2003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A]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만족	460	60
보통	210	27
불만족	100	13
계	770	100

[B] 효율성 평가: 사회적응에 가장 도움이 된 요소

	빈도	퍼센트
한국정부의 지원	272	40
본인의 노력	183	27
친지, 동료, 가족	89	13
학교, 종교단체, 민간단체	74	11
기타	59	9
계	677	100

<표 Ⅲ-11>한국생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2003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빈도	퍼센트
만족	469	60
보통	254	33
불만족	52	7
계	775	100

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현행 지원체계의 목표가 적어도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속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풍족하지 않다고 대답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60%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이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현행 지원체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 누구나가,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현행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나) 문제점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행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제기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A.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의지(근로의욕) 저해

현행 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가능성이다. 현행 체계처럼 정부가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경우 이들의 근로의욕 저하 → 실업 확대 →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실패라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러한 논란이 엄밀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운영해 온 상당수의 지원 인력들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 부재현상을 빈번하게 지적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적은 급기야 대중 매체들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19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들은 모두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관찰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표 Ⅲ-12> 참조). 물론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실업률에는 근로의욕 이외에도 기능부족, 언어문제, 관습차이 등 여타의 요인들이 더욱 커다란 작용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40%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아무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 아래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원체계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주장을 쉽게 부정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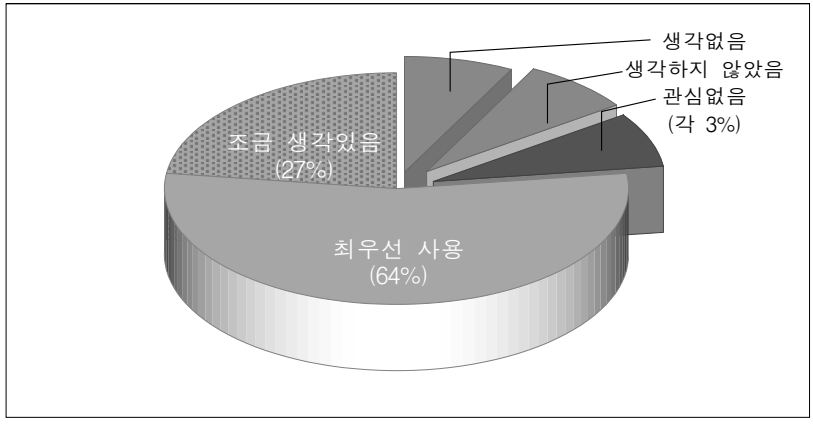
<표 Ⅲ-12>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률 현황

이영일 설문조사 (1998)			통일부 설문조사 (1998)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2003)		
총응답	무직응답	%	총응답	무직응답	%	총응답	무직응답	%
168	66	39.2	214	63	29.4	653	255	39.1

*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 결과는 20~59세까지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출처: 이영일(1998), 김성윤 외(2003.12), 2003년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그림 Ⅲ-3> 북한 및 제3국 가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수입 사용 의지 (2003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표 Ⅲ-13> 북한이탈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의 보호 내용별 비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분야	보호종류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계보호	주거지원	O	X	X	O
	생계비지원	O	O	X	?[1]
	정착금	X	X	X	O
자활보호	직업훈련	X	X	O	O
	취업알선	X	X	O	O
	생업자금융자	X	X	O	?[2]
의료보호	의료보호	O	O	O	O
교육보호	학비지원	O	O	O	O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에 의한 생계비 지원은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금 등을 소진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신청을 할 경우 수급 가능.
2) 생업자금융자는 없으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공기관의 편의사업 운영권 부여 등 생업지원 대책은 존재.
출처: 국회통일외교통상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1998. 10.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지원체계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 즉 취업을 돕는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처럼 높은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그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현행 지원체계가 일정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B. 지원자금의 용도외 유용 및 북한이탈주민 추가 입국 유인효과

현행 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입국 브로커 비용의 충당이나 해외 송금 등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정부 지원자금의 용도외 유용가능성과 이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추가적 입국 유인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상당수가 입국 후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을 자신들의 입국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22] 더욱이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약 91%가 자신들의 정착금 등 소득을 해외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데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송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지원자금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정착이라는 본래의 용도 이외로 유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유용이 일상화된다면, 이는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및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 한국입국을 유발함으로써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도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22] 세계일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응답 북한이탈주민들은 평균 486만원을 입국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04. 9. 16.

<표 Ⅲ-14> 입국 북한이탈주민 규모와 그 추정치, 1996~2007

(단위: 명)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실제치	56	85	71	148	312	583	1141	1285				
예측치	43	70	116	191	316	520	858	1413	2330	3840	6330	10434

* 추정식: log N=3.255+0.499 Time (단, N: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 Time: 시간)
(R^2= 0.952, S.E of Regression = 0.295)

C. 역차별 논란 가능성

현행 체계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Ⅲ-13>에 나타나 있듯이,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우리 사회의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체계 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논란은 현재화 된 것이 아니며, 또 그 논란이 현재화 되더라도, 소위 미국식의 우선적 처우이론(affirmative action theory) 등을 원용해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를 둘러싸고 기존의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그룹 사이의 경쟁이 격화된다면, 향후 현행 지원체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현재화됨으로써 정부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 모두에게 커다란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D. 재정부담의 급증 가능성

현행 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의 <표 Ⅲ-8>에 나타나 있듯이, 최근 수년간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몇 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재정부담이 현재의 몇 (십)배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Ⅲ-14>는 현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입국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의 경우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가 10,000명을 넘어서 2003년의 8배가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 예측치는 1996~2003년간의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를 시간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그 추세 방정식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2004~2007년의 입국자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국자 규모 추정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앞의 추세방정식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수년간 현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지금보다 수(십)배 규모로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을 것으로 믿는다.

E. 지원체계 운영상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현행 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착금 지원이 세대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세대 확정시 유리한 조건으로 정착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가 하면, 주거지원금의 경우 지역에 따른 수준차가 고려되지 않아 지역마다 지원금의 과소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앞서 지적된 문제들과 같이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 역시 현행 체계가 유지되는 한, 또한 새로운 지원체계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3) 현행 지원체계 문제점에 대한 세 가지 기본 가설의 검증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기초해 현행 체계의 변화를 꾀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현행 체계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원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현행 체계가 이룩해 놓은 이들의 생활보호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현실적 근거에 기초해 제기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현행 지원체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골라 이의 현실 적합성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수행한다.

(가) 가설 검정 1: 현행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의지 (근로의욕)를 저하시키고 있는가?

현행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욕이라는 변수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가설을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한 두 가지의 부분 가설로 분해한 후, 이들 부분 가설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A. 검증가설 및 검증모형

현행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현 체계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을 보유하든 보유하지 않고 있든, 직업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정규 직업을 갖든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을 갖든, 그들의 기대소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지원체계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특례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무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민간 또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할 경우 일정액의 직업훈련 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종교기관이나 민간지원기관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정규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규적인 직업을 갖게 될 때 예상되는 실질 기대소득이 매우 작아서, 직업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액과 별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정규적인 직업을 갖으려 노력하는 대신, 직업을 아예 갖지 않거나, 직업을 갖더라도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을 선호함으로써 여전히 우리 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현행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는 가설은 바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무직 또는 비정규직 선호 가능성을 지적하는 가설이다. 따라서 이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검증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될 것이다.

[검증가설 1-1]: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소득은 직업의 보유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검증가설 1-2]: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소득은 직업의 보유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들 가설을 '검증가설'이라고 부른 이유는, 비록 우회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판단하는

직업의 보유 유무/형태에 따른 기대소득의 차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대체변수(proxy)가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집단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현된(revealed) 직업의 보유 유무/형태에 따른 객관적 소득의 차이라는 변수이다. 즉, 직업의 보유 유무/형태로 인한 소득의 차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성하는 기대는 그들 집단 안에서 무직자, 비정규직 보유자, 정규직 보유자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의 차이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변수는 직업의 보유 유무/형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의 차이라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소득을 스스로 낮다 또는 높다고 평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비율이 무직자 집단과 유직자 집단, 그리고 비정규직 보유자와 정규직 보유자 집단사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의 보유유무/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득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위의 검증가설 1-1과 1-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형 회귀모형을 상정한다.

$$I = a + b_1 X_1 + b_2 X_2 + \Sigma c_i Y_i \qquad (2\text{-}1)$$

$$I' = a' + b_1' X_1 + b_2' X_2 + \Sigma c_i' Y_i \qquad (2\text{-}2)$$

[I: 객관적 소득, I':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평가), X_1: 직업의 보유 유무, X_2: 직업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Y_i: 기타 요인들, b_1, b_1', C_i: 계수(coefficients), a, a': 상수항]

식 (2-1)과 (2-2)를 추정한 결과 b_1과 b_1'의 값이 '0(zero)'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이 그들의 직업보유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 역시 그들의 직업보유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주관적 소득 모두가 직업의 보유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을 보유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앞의 검증가설 1-1을 '참(true)'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식 (2-1)과 (2-2)를 추정한 결과 b_1과 b_1'의 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주관적 소득이 그들의 직업보유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주관적 소득 모두가 직업의 보유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을 보유하는 경우 자신들의 소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앞의 검증가설 1-1을 '참(true)'이라고 받아들여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추론과정을 적용하면, 앞의 검증가설 1-2의 현실 적합성 여부가 식 (2-1)과 (2-2)의 b_2와 b_2'의 추정 결과에 의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시현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이나 소득평가는 그들의 직업보유 유무/형태뿐만 아니라 성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직업 변수들만의 순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여타 변수를 통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고, 이런 이유에서 앞의 식(2-1)과 (2-2)에는 직업 변수들과 함께 기타 변수들의 항목 또한 삽입된 것이다.

B. 검증변수 및 이용 데이터

식(2-1)과 (2-2)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 자료가 이용된다. 동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 일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실시된 유사 설문조사 가운데 표본의 크기가 가장 크고(총 응답자 780명), 설문 문항이 가장 방대한 조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동조사 자료 가운데 실질적인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20~59세까지의 성인 응답

자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이라는 변수를 위해서는 그들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자료를 이용한다. 동 자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월평균소득을 '(1) 5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단위로 상승시켜 '(5) 200만원 이상'의 항목까지 측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평가)이라는 변수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이 생활하는데 충분한 편인가'를 묻는 설문문항의 응답자료를 이용한다. 동 자료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1) 매우 모자란다'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5) 매우 충분하다'까지 5단계로 측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관련 변수를 위해서는 직업의 보유 형태를 묻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자료를 이용한다. 먼저 동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1) 무직자, 2) 비정규직 보유자, 3) 정규직 보유자로 세분한 후, 직업의 보유 유무와 형태를 정규직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한다. 즉 정규직 보유자를 기준으로 무직자의 경우에는 '직업보유유무'라는 변수를 만들고, 비정규직 보유자의 경우에는 '직업형태'라는 변수를 만들어, 무직자의 경우에 '직업보유유무'에는 1값을 기타의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며, 비정규직 보유자의 경우에는 '직업형태'에 1값을 기타의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감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삽입한다. 우선 응답자의 성을 가변수 처리하여 여성의 경우 1값을, 남성의 경우에는 0값을 각각 부여한다. 응답자의 연령 역시 삽입한다. 본래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에서는 응답자의 연령을 '(1) 10세 미만'에서 10세씩 상승시켜 '(7) 60세 이상'까지 측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동 자료를 '(1) 20~29세'에서 10세씩 상승시켜 '(4) 50~59세'까지로 재배열하여 이용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하기 위해 이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자료를 이용한다. 동 자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수준을 '(1) 무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5) 대학교 이상’까지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체변수로 이들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변수에 삽입한다. 동 변수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자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직접 적어낸 것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보유유무를 가변수 처리하여, 종교를 보유했을 경우 1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값을 각각 부여해 이용한다. 이는 각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종교 단체들로부터 유의미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표 Ⅲ-15> 북한이탈주민 소득에 대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객관적 소득	주관적 소득(평가)
인구학적 변수	성 (여성=1)	-0.228 (0.119)*	0.037 (0.137)
	연령	0.025 (0.63)	0.065 (0.72)
사회,교육적 변수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0.058 (0.73)	-0.007 (0.86)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0.009 (0.003)***	-0.008 (0.003)***
	종교유무(있음=1)	-0.159 (0.12)	-0.31 (0.138)
직업변수 (정규 직업 보유자 기준)	무직	-0.434 (0.3)***	-0.599 (0.172)***
	비정규직	-0.219 (0.116)*	-0.2 (0.172)
상수항		2.027 (0.3)***	3.018 (0.349)***
F-통계량		8.18 (p=0.00)***	3.53 (p=0.00)***
R^2		0.195	0.094

주) 1. ( ) 안은 표준편차
2. ***: $p < 0.01$, **: $p < 0.05$, *: $p < 0.1$

C. 검증결과

<표 Ⅲ-15>는 이상의 변수들을 토대로 식(2-1)과 (2-2)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직업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기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소득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럼 이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근로의욕 저해 가설'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보유 유무/형태 등이 그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보유 유무와 형태는 그들의 객관적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를 기준으로 할 때 직업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이 더욱 작은 경향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정규직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아래에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무직/비정규직/정규직 보유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의 객관적 소득의 격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평가)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대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을 기준으로 할 때 직업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규모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정규직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들과 비정규직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소득 평가에 대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관적 소득(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비록 객관적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주관적 소득(평가)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D. 검증결과의 해석

그렇다면 이상의 검증결과를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근로의욕 저해 가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은 직업의 보유유무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소득(평가) 역시 직업의 보유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앞의 식(2-1)과 (2-2)의 b_1과 b_1'의 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이는 앞의 검증가설 1-1이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증가설 1-2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약간 복잡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은 직업의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이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득(평가)는 직업의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앞의 식(2-1)의 b_2의 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식(2-2)의 b_2'의 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은, 1)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2) 현실적으로 그 차이가 매우 적어서, 3) 북한이탈주민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면, 검증가설 1-2는 '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객관적 소득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관련해 형성하는 기대(소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근로의욕 저해가설'을 두 가지의 부분 가설로 분해한 후 이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제 그 검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행 지원체계 아래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보다 보유할 경우에 자신들의 기대소득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체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 자체를 보유하려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으로는 지지하기가 매우 힘든 주장이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의 형태와 관련해서

는 정규직을 갖든, 비정규직을 갖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대소득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체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규직을 보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주장이 될 것이다.

(나) 가설검증 2: 현행 지원체계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자금을 본래 용도 이외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절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금 등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자체가 곧 이들의 현실적 자금유용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원자금을 타 목적으로 유용하려는 의지가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설문에 대한 이들의 응답 자체가 과연 그들의 진실된(genuine)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경우, 설사 실질적으로 도울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물어 올 경우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대답할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의 본래 목적 외 유용 가능성'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와 관련하여, 1) 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일부를 해외 가족들을 위해 유용할 의사가 있는가와 2) 이들의 이런 의사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검증하도록 한다.

A. 검증가설 및 검증모형

먼저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도록 한다.

[검증가설 2-1]: 해외의 가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자금 유용 의지는 그들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간단한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만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의 가족을 위해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의지는 그 가족이 자신들의 직계, 다시 말해 배우자나 자녀 등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지가 진실된 것이라면, 그 의지의 강도는 직계가족을 해외(북한)에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검증가설 2-2]: 해외의 가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자금 유용 의지는 해외 가족이 직계 가족(배우자나 자녀 등)인가 아닌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 가족들에게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분류한 후, 양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사에 소득이나 해외 직계가족의 존재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종속변수(해외 가족들을 위해 소득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없다)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까닭에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에 의한 통상적 회귀모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23]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주형 종속변수를 추정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general)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로짓(logit) 회귀모형을 제

[23] 범주형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Alan Agresti,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wiley-Interscience, 2002) 제5장을 참조.

출하고, 이를 검증한다.

$$\log\left(\frac{\pi}{1-\pi}\right) = a + b_1 X_1 + b_2 X_2 + \sum c_i Y_i \qquad (3)$$

[단, π: 해외 가족들을 위한 소득 사용 의지, X_1: 소득, X_2: 해외 직계 가족 존재 유무, Y_i: 기타 요인들, b_1, c_i: 계수(coefficients), a, a': 상수항]

만일 검증가설 2-1이 '참'이라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 가족들에게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승산비 (log odds), 즉 $\log\left(\frac{\pi}{1-\pi}\right)$ 에 그들의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식(3)의 b_1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될 것이다. 또한 검증가설 2-2가 '참'이라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 직계가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그들의 소득을 이들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식(3)의 b_2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의 가족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비단 소득이나 해외의 직계가족 존재여부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종교보유 유무 같은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앞의 식(3)에는 이들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타 변수들의 항목이 삽입되어 있다.

B. 검증변수 및 데이터 그리고 검증 결과

식(3)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 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는 동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 성인이라고 인정되는 20세 이상의 응답자에 관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이용한다.

<표 Ⅲ-16> 해외 가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 사용 의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사용 하겠다/사용하지 않겠다
해외에 직계가족 존재유무 (존재함 =1)	1.51 (0.311)***
소득	0.218 (0.201)
성 (여자 =1)	-0.355 (0.305)
연령	-0.056 (0.127)
종교유무 (있음=1)	-0.389 (0.343)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0.009 (0.004)
(북한에서의) 교육수준	0.31 (0.186)
상수항	1.919 (0.805)
표본 크기	612
-2 Log Likelihood	334.360
Pseudo-R^2 (Cox & Snell)	0.56

주) 1. ( ) 안은 표준편차
2. ***: $p < 0.01$, **: $p < 0.05$, *: $p < 0.1$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 가족들에게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을 확률(승산비)과 관련하여 동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소득을 해외 가족에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최우선적으로 사용+조금 생각 있음) 답한 응답자들에게는 1값을,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각각 0값을 부여해 분석에 이용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은 그들의 객관적 소득에 대한 응답자료를 이용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 자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월평균소득을 '(1) 5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단위로 상승시켜 '(5) 200만원 이상'의 항목까지 측정하고 있다. 해외 직계가족의 존재여부에 대한 변수는 직계가족이 존재할 경우에는 1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0값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처리한다.

한편 식(3)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변수로는 응답자들의 성과 연령, 그리고 북한에서의 교육수준과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종교의 보유유무 등을 삽입한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앞의 식 (2-1)과 (2-2)를 추정할 때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동일한 것들이며, 또 이와 동일한 방식의 처리과정을 거쳐 분석에 이용한다(앞의 (3)-(가)를 참조).

<표 Ⅲ-16>은 이상의 변수들을 토대로 식(3)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우리가 고려한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모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 수준 역시 그들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소득 수준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결과 이들의 결정은 단 한 가지 변수, 즉 해외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직계가족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coefficients)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추정치의 절대값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1.51, Exp(b)=4.52). 즉, 해외에 직계가족을 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 자신들의 소득을 해외의 가족에게 사용할 확률이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C. 검증결과의 해석

이상의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앞의 검증가설 2-1은 '참'이 아닌 반면, 검증가설 2-2는 '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3)의 b_1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지 않은 반면, b_2값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의 본래 목적외 유용 가능성' 가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만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첫째,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의 본래 목적외 유용 가능성' 가설은 현실적으로 그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 직계가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일수록 자신들의 소득을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

러한 응답은 그들의 진실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의 본래 목적외 유용 가능성은 예상보다도 더욱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이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외 가족을 위해 소득을 사용할 경우, 1) 해외(북한)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추가적 입국 유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2)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에서의 생활형편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도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가설검증 3: 현행 지원체계는 향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가?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향후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들이나 이들의 대표자들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표 Ⅲ-17> 소득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
(2003 통일연구원 국민통일여론조사)

[A]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 감정

(단위: %)

	긍정적	잘 모름	부정적
소득 100만원 미만	58	23	19
소득 100만원 이상	57	24	19

[B]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평가

(단위: %)

	긍정적	보통	부정적
소득 100만원 미만	30	30	39
소득 100만원 이상	33	42	25

지원체계의 역차별 논란 가능성' 가설의 현실 적합성 여부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A. 검증가설과 검증모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태도와 관련하여 2003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정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사회계층이 그 밖의 사회계층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 저소득층의 평가가 타 소득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현행 지원체계의 역차별 논란 가능성'은 향후 실질적인 논쟁거리로 전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현행 지원체계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리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규모 역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부정적 북한이탈주민 인식이 빠른 속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역차별 논란 가능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한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검증가설을 제출한다.

[검증가설 3]: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을 기준으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을 구분하고, 이런 입장

차이에 과연 '저소득층 vs. 비저소득층'과 같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종속변수(긍정적/중립적/부정적 입장)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항) 로짓 회귀모형을 제출한 후, 이를 최대우도(ML) 추정법에 기초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해 검증하도록 한다.

$$\log\left(\frac{\pi_n}{\pi_N}\right) = a + b_1 X_1 + \Sigma c_i Y_i \qquad (4\text{-}1)$$

$$\log\left(\frac{\pi_p}{\pi_N}\right) = a' + b'_1 X_1 + \Sigma c'_i Y_i \qquad (4\text{-}2)$$

[단, $\log\left(\frac{\pi_n}{\pi_N}\right)$: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중립적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부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

$\log\left(\frac{\pi_p}{\pi_N}\right)$: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중립적 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긍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

X_1: 월소득 100만원 미만 여부, Y_i: 기타 요인들, b_1, b_1', c_i, c_i': 계수(coefficients), a, a' : 상수항]

만일 검증가설 3이 '참'이라면, 식 (4-1)의 b_1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될 것이 틀림없다 [식 (4-2)의 b_1'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지 않을 것임]. 반면, b_1'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지 않고 b_1'이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은 기각되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b_1과 b_1' 모두 '0'이라는 통계적 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여부는 북한이탈주민평가에 無영향), 검증가설 3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평가하는 입장의 차이에는 비단 '저소득층 vs. 非저소득층'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연령 같은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또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득집단에 따른 순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여타 변수들을 통제해야만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

라 앞의 식(4-1)과 (4-2)에는 소득집단 변수와 함께 기타 변수들의 항목 또한 삽입되어 있다.

B. 검증변수 및 데이터 그리고 검증결과

식 (4-1)과 (4-2)를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2003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동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55개의 문항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들 설문 문항 가운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문의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동 문항의 응답 자료를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 중립적(보통),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응답자의 소득집단과 관련해서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응답자에게는 1값을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게는 0값을 각각 부여, 가변수 처리함으로써 분석에 원용한다.

<표 Ⅲ-18> 우리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 적응도 평가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긍정적/중립적	부정적/중립적
성 (여성=1)	-0.044 (0.149)	0.101 (0.16)
연령	0.001 (0.06)	0.023 (0.006)
학력수준	-0.013 (0.64)	0.025 (0.68)
북한에의 친척 유무(있음=1)	0.033 (0.296)	-0.049 (0.303)
소득 (100만원 이하=0, 여타=1)	0.223 (0.262)	0.498 (0.257)*
상수항	-0.24 (0.734)	-1.544 (0.781)**
-2 Log Likelihood	1395.284	
Pseudo-R^2 (Cox & Snell)	0.28	

주) 1. ( ) 안은 표준편차
2. ***: $p < 0.01$, **: $p < 0.05$, *: $p < 0.1$

한편, 식 (4-1)과 (4-2)에 삽입되어 있는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과 연령, 학력수준, 북한에의 친척존재 유무 등 네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

이들 변수 가운데 성(여성=1, 남성=0)과 북한에서의 친척존재 유무(있다=1, 없다=0)는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원용하며, 여타의 변수들은 원자료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을 수정 없이 사용한다. 원자료에는 연령의 경우 최저 15세에서 최고 69세까지의 실제 연령이 나타나 있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1)초등학교졸업'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상승하여 '(6)대학원 이상'까지 6단계로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다.

<표 Ⅲ-18>는 이상의 데이터를 토대로 식(4-1)과 (4-2)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우리가 고려한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모두는 북한이탈주민 평가를 둘러싼 우리 국민들의 입장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소득집단 변수는 이에 대해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라는 변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적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립적 평가 기준). 그러나 동 변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적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경우 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7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b= 0.4908, Exp(b)=1.65). 이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는 소득집단 변수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C. 검증결과의 해석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의 검증가설 3이 '참'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를 둘러싸고 북한이탈주민과 경쟁관계에 있는 저소득층 집단이 북한이탈주민 대해 타 계층 보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이들 저소득층이 누리는 것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의 입국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향후 이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비경제적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해외체류, 남한으로의 입국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편입과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과 남한 사회네트워크에 동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비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는 크게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단계와 사회진출 후 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나원 내에서는 2개월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안정 및 심성 수련, 건강 검진 및 정서함양, 언어적응능력 등 우리 사회 이해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현장체험 학습을 통하여 비경제적 차원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경제적 차원의 지원체계로 전문심리상담사와 진로상담사를 채용하여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간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교육생으로 인식하고 교재를 개발하거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지원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초교육을 실시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나원 수료 이후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차원의 비경제적 지원체계로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

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의하면 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현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총무부, 대외협력부, 종합생활상담센터로 조직이 편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총무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 지원 기획・진행, 대외협력부에서는 협력단체 관리, 기금・홍보 활동, 종합생활상담센터에서는 취업프로그램, 심리・건강 상담 프로그램, 자매결연 및 생활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는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18일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종합생활상담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분야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 연대, 상담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원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취업 및 창업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교육, 가족, 법률문제, 자매결연 요청 등 일상생활 안정에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개소 이래 취업 및 창업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상담은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한기업인들의 구인상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인상담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남한기업인의 상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인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확대 현상과 더불어 '취

업보호제'와 같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간접취업지원제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구직, 취업지원제, 직업훈련, 창업을 위한 대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담내용을 통해 경제적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경제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급여 및 진급 문제, 업무능력과 대인관계의 고충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취업 이후 취업과 연계된 사후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담과정에서 구직을 요청할 경우 1차적으로 상담센터로 접수된 구인건과 연결하여 해결을 모색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기대하는 직업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간 요구수준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구인을 원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이른바 3D직종인 반면, 직장을 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대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구직의 기대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직 북한이탈주민과 구인 기업간의 1차적인 직접적인 연계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각 거주지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이용방법을 설명하거나 창업 및 직장 내 문제 등으로 전문기관이나 관련 사업장의 도움이 필요할 시 공문협조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는 취업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가 개소된 이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업 및 창업 상담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해도 생활안정 및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속성을 얻기 힘들고 계속적인 가족입국사례 증가로 가족 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보

면 자매결연 희망, 교육관련 지도, 가족 내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법률적 문제, 건강상의 이유 등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상담이 40%정도를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 상담 중 진학과 진로에 대한 교육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매결연, 법률상담 순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분야별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전문집단과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택, 교육, 의료, 기초생활 등 생활안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는 상담도 들어오고 있다. 또한 최근 가족입국사례의 증가로 인해 가족 내 문제, 즉 부부갈등 및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충상담의 사례로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고령자나 사기사건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잃고 후원 및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남한의 친척을 찾거나 장례방법을 문의하는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해외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 협의회는 주로 참가 민간단체의 활동방향, 상호 정보 공유,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심포지움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단체가 전문성을 발휘하되,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정착하는 지역수준에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 분야별 담당관제를 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담당

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신변보호담당관이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들 신변보호담당관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신변보호담당관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면서 초기정착지원의 전문성・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편입 프로그램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기능은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의 형성이 필요하다.

취업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의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의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체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업훈련 비용 부담, 훈련수당 지급, 고용지원금, 그리고 현재 개정 예정인 장려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금 지급 위주의 '보호' 정책에서 탈피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통하여 자활・자립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못지않게 이질적인 사회・경제체제에서 생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경제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 또한 중요하다. 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6여 곳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 53.4%,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14.8%, 신변보호담당관 9.8%, 취업

보호담당관 7.5% 등의 비율로 취업계기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취업보호담당관이 신변보호담당관보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족 단위의 입국비율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교육지원과 성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남한사회 적응력 제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진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상이한 체제와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요인 등을 극복하고 남한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런데 학제의 차이와 교육내용의 차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남한의 제도권 교육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 데 필요한 관리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영세한 규모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교육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력인정 특성화학교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비경제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일부는 1999년 5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14호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변, 취업,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사회복지관, 종교・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는 2001년부터 조직되어 2004년 6월 현재 서울 6개 지역(강남, 강서, 양천, 노원, 송파, 중랑)과 지방 7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입국자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용,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드웨어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민간차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비경제적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현재 분야별 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각 지역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연의 임무가 과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이외에도 점차 민간차원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직능단체가 전문분야의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률지원을 위한 체계로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법체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14개 지방변호사회에 각 지부를 두고 있다. 변호사단은 크게 2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전화, 내방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협회 본부나 지부, 혹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단에서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게 된다. 담당변호사는 법률상담(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소송대리 등)를 실시하게 된다. 변호사단을 통한 법률상담 중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하여 민사의 경우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구조활동을 시행하고, 형사의 경우 무료로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전화, 내방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주체별 지원체계 검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지원체계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정착지원시스템으로 대별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정착지원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되어 왔고, 44개의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다분히 혼합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명하는 비율이 높으나 이들의 취업 등 사회정착은 우리정부와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중될 것이나, 사회주의 보호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아 이들의 불만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형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참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웃돕기라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결여와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의 경제적 능력 결여로 역할과 성과는 제한되어 있고, 정부와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규모 국내 유입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책의 유연성 부족, 제도적 장치 결여 및 정착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정책 전반에 걸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원정책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대별하여 지원정책의 성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우리정부는 1993년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을 대폭 축소하였는바 이것이 초기적응에 실패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1997년 관련법률에 의해 대폭 정착금을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착수준은 이에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 지원내용과 수준,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정부주도의 사회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전혀 다른 사회주의 보호문화에서 생활해 온 북한이탈주민들

이 단시일 내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지원하는데 있다. 정부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정의(복지와 의무의 균등분배), 형평성(사회 구성원간의 합당한 질서와 공정성) 및 자립·자활 지원(자립의지 강화)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막연한 지원보다는 남한 사회의 진출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은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 이후 관계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 입소하여 8주간(2달)의 남한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을 받고 이와 더불어 이 기간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기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회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편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에 초기정착금을 대폭 증액하였고 생활보호와 취업알선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9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보호제 실시, 노령연금특례 인정, 생업지원제도 도입,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 등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정액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정착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가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 범위 내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85㎡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지방거주장려금(서울 인근도시 및 직할시는 주거지원금의 40%,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70%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 사회에 적응 돕기 위해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전문 진로상담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 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훈련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일정액의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진로지도와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취업 후 1년까지는 월 최고 50만원, 1년부터 2년까지는 월 최고 70만원)범위 내에서 매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로금(상한선 2억 5천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이 특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이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례를 인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켜 생계비 지원하고 있다. 동일한 논거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수급권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기관에 편입학 경우에 정부가 이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교육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다양한 지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

(2) 정부 재정지원의 실적 및 특징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2004년도 486명의 한꺼번에 입국한 사태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지원 실적은 1996부터 2002년까지 총 487억 원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이 생활보호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정착금 용도로 전체 지원자금의 62%에 달하는 총 330억 원이, 그리고 주거지원금이 전체 지원자금의 23%인 112억 원이 지출되어, 이 두 가지 용도가 총 정부 지원자금의 85%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 생활보호에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중요한 변수인 직업훈련수당이나 고용지원금에 대한 지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정부 재정지원자금 중 5%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80~9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정부주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원규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에서 생활보호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할애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생활보호에 전체 지원금액의 85%를 사용하고, 교육과 취업에는 9%정도 사용하고 있다. 초기의 생활보호가 끝나면 취업과 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문에 보다 많은 지원이 투입되어야 하겠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직접적이고 무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 독일 및 이스라엘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소액의 생활비로 한정하는 사례와 많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이 북한이탈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정착금, 주거지원, 취업, 의료, 교육, 신변보호 등 삶의 전부를 떠안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냉전구도의 유산으로 아직도 체제경쟁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정부의 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2003년 통일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만족'이 60%, '불만족'이 13%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하나원 조사에서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능력부족'이 18.9%로 가장 높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10.7%, 그리고 '정부의 지원부족'이 3.4%로 일곱 번째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4]

또한 남한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60%가 '만족'이고, 7%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2004년 하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만족한다가 96%('아주 만족 한다'가 30%, '어느 정도 만족 한다'가 66%),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가 2.9%로 나타나고 있다.[25]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정부 재정지원에 만족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응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 또는 정부 지원부족으로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응에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사회

---

[24]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및 하나원 설문조사(2004. 5) 참조.
[25] 위의 조사 참조.

적응에서 자신의 능력부족을 지적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실업율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다른 대리 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정부 재정지원 중심의 부작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전방위 무상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보다 강력한 지원으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급증과 사회적인 부담은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2004년 하나원 조사에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이 77.7%로 높게 나타나고, 이 생계급여도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39.8%), 기간연장(34.5%), 금액 증대(18.9%) 순으로 생계급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 생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르바이트가 20.9%, 정착금이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지원 중 부족하거나 미흡한 지원분야에서 생계급여 지원이 12.1%, 취업보호(고용지원금) 지원이 9.2%, 부족한 것이 없다가 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 지원 중 생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보호지원금의 연장을 원하는 것은 취업자들의 경우에도

직장에서 취업보호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에 실직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 약화와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원과 근로의욕 저하와의 관계에 대한 검증(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 직업의 유무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따라 소득의 격차는 있지만, 이것이 주관적 소득(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을 가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해외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 즉 지원자금의 유용가능성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에 가족을 위해서 지원자금을 유용할 개연성이 높고,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추가 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정착금과 수입을 북한,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3.5%, '조금 생각이 있다'가 26.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2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남한 주민들 중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1.7배나 높다는 가설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층 간에 복지체계를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4년 7월 통일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의지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착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 배경 요인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자활의지를 퇴색시키고, 정착금의 세대별 배분으로 초래되는 허위진술 및 재산배분 갈등 및 북한이탈주민 증대에 따른 예산부담 등을 들고 있다. 정책개선의 기본방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취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

---

[26]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 190.

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자립의지에 따른 장려금 제도 도입, 초기 정착금의 최소화, 일정기간(2~3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 분할 지급으로 취업구조 건실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시에 많은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 현금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조기 탕진 및 생활자금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서 초기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비와 가재도구 구입(세대 당 약 200만원) 및 긴급생계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기 적응기간(2년)동안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 유지비의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건설 중단으로 공급물량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1인 기준 1000만원, 2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 임대보증금만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에 지급하게 될 것이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현행 5년 후 지급방식을 유지하되, 장려금 대상지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착장려금은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월최저임금액의 50배 규모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노동부가 예시한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1개월 당 30만원씩 최장 12개월 이하 훈련자 및 기능대학 수료자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훈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취득 및 취업장려금은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관련 자격 취득자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동일 직장에 1년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며 총 지급횟수는 3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크제를 적용하여 1년차는 300만원, 2년차는 400만원, 3년차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될 것이다. 취업 시 생계급여 미지

급이 취업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해당금을 장려금으로 제공해 달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요망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착지원금의 지급방식을 조정함에 따라 타격을 받게 될 계층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정착가산금이 고안되었다. 정착가산금은 연령, 장애, 장기치료,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으로 구성되어, 월최저임금액의 50배로 지급될 것이다.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기본금 분할 지급분 지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분기별 20만원씩 지급될 것이다. 장애인 및 장기 치료 가산금은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3개월분씩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 시 횟수에 따라 각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은 부 또는 모가 없는 결손아동세대에 360만원 정착기본금과 합산하여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 정책은 향후 규모의 증가, 재정부담 증대 및 자활의지 제고의 방향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대처한 미국, 독일 및 이스라엘의 경우를 우선 비교하고, 준거 틀로 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단체로 난민정착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는 난민정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부서가 재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 배달자는 10개의 민간자원기관이 담당하고, 민간자원기관들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정착 기간은 베트남 난민의 경우 초기 2년에서 18개월, 그 후 1년으로 단축 지원하였다.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인해 난민들은 난민기관이 정해주는 곳에 취업해야 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수혜(SSI)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취업의욕을 고취시킨다. 난민정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취업시키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립하여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정착금 지원은 난민과 민간기관에 50대 50으로 지원

하고 민간난민기관은 취업, 언어 등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프로그램 실시 기관들은 난민 도착 이후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함이 없이 3개월 이내(최장 1년 이내)에 취업을 통해 완전히 자립하도록 하고, 1인당 1,000~1,400달러의 지원(grant)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고용을 촉진시킨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난민들이 재이동함으로써 민족코뮤니티가 결성되어 사회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빠른 속도의 경제적 신분 상승을 이루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27]

독일의 경우에는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철거 이후 대규모 난민정책 수립하였고, 1990년에 「긴급수용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개시하였다. 수용절차는 연방정부-주중앙수용소-임시거주지-개인주택 입주 절차 등이나 이주민 분산원칙으로 대량 이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정착지원은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기본 구호 및 정착 상담으로 이루어졌고, 각 주의 지원은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취업상담 및 주선, 실업수당 지급,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회보장 혜택제공, 자격증 인정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독일의 이주민 지원시 주요원칙은 무상지급을 지양하고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이주민들에게 '책임감을 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 재정지원은 연방보조금 1인당 200 DM, 주정부보조금 15~30DM, 잡비 수준으로 100DM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금노동자로서 150일 근로경험자에게 정착금의 경우 최대 312일을 지급(노동자 평균임금)하고, 실업부조금은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하였다.

초기 단계부터 금융대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주택매입, 가재도구 구입(초기 2년 동안 무이자 상환 10년)과 자영업을 위한 창업자금(최고 200,000DM이고 상환기간은 2년 무이자 포함하여 12년) 등을 모두 융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초기단계에서의 소액의 현금지원 이외는 이주자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착 초기에 단기적으로 현금 지원과 융자

---

[27]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가을호, 1999) 참조.

등 재정지원이 많이 동원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이주민들의 체제적응을 촉진시켰고 비용절약을 가져왔다. 이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와 접촉을 증대시켰고, 그 매개체로 시민대학, 스포츠 교류 및 정치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서독사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회화 교육을 지속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건국 초기에 이주민을 위한 '유대인청(Jewish Agency)'을 1968년에 이주민부(Ministry of Absorption)로 내각에 설치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담부서로 이주민의 동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적응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였고, 이주에 대한 정보와 사정여행 알선 및 이주비용까지 대부해 주었다. 직업적 적응은 성공하였으나 내적 통합인 사회심리적인 적응은 어려웠다는 자체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가 형성되었고 국력 신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난민 및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의식, 경제력, 사회보장체계, 시민단체(NGOs)의 자원봉사활동의 전통, 난민민족공동체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8] 사회정착과정에서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동화과정을 촉진시키는 흥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원 퇴소 이후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일종의 도우미로 정부는 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신변보호(경찰), 거주지보호(시, 군, 구) 및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표Ⅲ-19>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보호담당관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2003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변보호담당관(담당경찰)에 대한 만족도(매우 또는 다소 만족)는 54%로 과반수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시,군, 구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는(매우 또는 다소)는

[28] 위의 글 참조.

31%정도이며, 불만족(매우 또는 다소 불만족)의 경우는 약 22%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또는 다소 만족의 경우가 29%이며, 다소 또는 매우 불만족의 경우는 약 26%로 나타났다.[29] 취업보호담당관제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설문 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신변보호담당관이 제일 높은 비율인 20.4%로 나타났고, 다른 담당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다.

과거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지고 있어 과거보다는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와 보호기간이 과거 2년에서 현재 6개월로 줄어들고, 1:1 보호에서 1:5 이상으로 담당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일상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고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담당관 개인의 변수에 따라 변화가 많아 업무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긍정적인 평가는 낮아지고 있다.

하나원 조사의 심층면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03년 통일연구원조사와 다른 점이다.

---

[29]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p. 221~222.

<표 Ⅲ-19> 거주지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거주지 보호	- 교육지원: 북한 학력인정, 편·입학지원, 학비 면제 - 의료지원: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비 면제 - 생계보호: 생계곤란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로 수급권자 편입주선 -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임무 ·거주지보호업무의 총괄조정: 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지원, 주택알선·교환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 ·거주지보호대장 변동사항 보고(매분기 익월 10일) ·각종 신청서 접수대장 사본 송부(매분기 익월 10일) ·교육대상자 증명서 및 학력확인서 대장 사본 송부(매년 3월 10일) ·거주지보호담당관회의 및 연수 참석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취업보호	-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직업훈련수당 지급 - 취업보호제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내)을 2년간 지원 - 취업보호담당자 임무 ·취업보호 대상 사업체 알선 ·고용지원금의 접수·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대장 작성·관리 ·취업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안전 보호 및 사회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착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 - 주요 사업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취업주선 지원사업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홍보 및 모금활동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파악 및 관련자료 유지 ·모금조성을 위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기타 후원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전국 11개 협의회 운영중) - 주요사업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정착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등

출처: 김선화, "미국 난민정착지원시스템의 북한이탈주민 적용을 위한 제안,"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에서 인용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은 보호담당관 중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통일부도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업무와 예산을 대폭 인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마는 일년에 1~2번의 단합대회 정도), 동에 주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주요 업무를 위임하는 사례가 많다.

하나원 조사에서 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경험은 71.4%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빈약, 취업기회제한, 사회적 차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체가 힘든 사항에서 취업보호담당관의 기능과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층면접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나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신뢰도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이들과의 접촉 기회가 극히 적고, 신변보호담당관 선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과거의 사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 민간단체

(1)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전 부문을 정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역할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보조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표Ⅲ-20> 참조). 따라서 지원체계는 정부주도-민간보조형이라 간주할 수 있다.[3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모든 단계를 주도하고 있고,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역 지역협의회」 구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서 종교, 사회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약44개의 민간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착

[30]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강의자료(2003. 10.), p. 7.

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여 성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정착에 관심이 있는 지역 민간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호담당관, 민간대표자와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민간단체들의 주요 역할은 자립지원, 자매결연 및 청소년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표Ⅲ-21> 참조). 민간차원의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전반에 관한 이차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정착에 필수적인 역할(주거 및 생계보호, 신변보호, 직업훈련 등)을 담당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정착이라는 다양한 차원을 현재의 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바, 이러한 기관이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을 파트너로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한계가 있는 부분을 위임받아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착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61개소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10여 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은 길게는 4~5년부터 1~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1] 이들 사회복지관은 민간단체들이 재단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32] 10여 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 및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

[31]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 p. 2.
[32] 오혜정, 이신중 수녀님,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 시 증언, 2004. 8. 20.

<표 Ⅲ-20> 미국과 한국의 지원시스템 비교

영역구분		미국(난민)	한국(북한이탈주민)
정부부서		연방정부-주정부 연방정부 국무성 보건복지국 산하 난민정착지원부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경찰청)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관계성		- 정부가 민간단체에 역할위임(위탁)(민간단체를 통한 난민서비스 실시) - 정부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 정부의 직접 지원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의 일시적·한정적 지원
민간단체 현황		- 정부지원민간기관 National Voluntary Agencies(10개) : 전국조직망을 가진 난민지원전문기관 : 각 주별로 개별기관 산하 및 연계기관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있음.	- 종교단체, 사회시민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40여개 :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및 재북동포 등 다양한 지원 실시
민간단체의 역할		정부의 파트너로서 난민정착지원의 실행 전담 기관	-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공식적인 업무협력체계가 없음. : 하나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원활동 : 해외에서의 지원활동
거주지배정 이후 관리시스템		지역 내에 있는 난민전문지원기관에서 1:1로 지속적 관리시스템 : 다수의 case manager(사회사업가) 및 job developer가 난민을 1:1로 상담·취업시키며 조기정착을 유도함. : 법률가, 의사, 상담심리사 등이 기관 내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지원	- 정부주도적 관리시스템 (보호담당관제도: 신변, 취업, 거주지) : 신변보호담당관 1:1 관리, 취업 및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역별 배치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활동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제공해서 일시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거나, 연고자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함.	하나원 퇴소시 정부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배정(정착금 내 임차료 포함 지원)
	생계 지원	초기 생계비 일부만 지원하고, 대개는 1개월 이내 취업을 통해 자급하도록 함. (경제활동 불가능자 및 요보호자에 대해서 SSI 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이 없을시 수급권자 혜택부여
	취업 지원	기관에서 1주일 이후로 취업실시 이후 지속관리, 취업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원(직업훈련도 병행실시)	취업보호담당관제도 : 취업보호제도 및 직업훈련무상교육 및 훈련수당 제공
	교육 지원	영어교육, 자녀들 교육 등	대학무상교육
	정착금 지원	1개월 정도의 생활비 지원	1인당 약 4,000만원정도 지원
	기타 서비스	지역소개 및 환영식/정신건강관련서비스/법률서비스/창업지원서비스 등	후원회 및 지역협의회,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지원 등

출처: 김선화, "미국 난민정착지원시스템의 북한이탈주민 적용을 위한 제안,"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에서 인용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없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없다. 넷째, 지역사회복지관의 문이 개방되어 있지도 않고, 영구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관이 위치하지 않고 있어 활용되는데 제약이 있다.[33] 마지막으로 거주지 보호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3차원의 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곧 현재의 제도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34]

통일부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민간단체들의 상호정보 교류와 협력 지원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또한 이 조직은 자체적으로 심리상담, 취업알선 및 구직정보 제공, 무연고청소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표Ⅲ-20>과 <표Ⅲ-21>참조).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난민정착지원전문기관이 정착지원 업무를 실행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알선이 사회정착의 핵심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과 직업훈련은 직능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직능단체는 16개 직능별로 332개 단체가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관련, 직능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수적 증가로 이들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의 활동은 이들의 학습지도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

[33] 위의 증언.

[34] 김선화, “미국 난민정착지원시스템의 북한이탈주민 적용을 위한 제안,”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

결연사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동기부여 및 이들의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대안학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표 Ⅲ-21>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가양7복지관	사회배출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릉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감리교 서부연회	사회배출자	결연사업
극동방송	사회배출자	기초생필품 지원
남북나눔운동	사회배출자, 국외 북한이탈주민	결연, 해외체류자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배출자, 하나원교육생	법률지원변호사단 구성 운영
두레마을	사회배출자, 국외 북한이탈주민	결연, 해외체류자 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회배출자	생계지원 및 자매결연 알선, 구인구직활동, 심리상담, 무연고청소년 관리, 민간단체연계망 관리 등
북한인권시민연합	하나원 교육생, 사회배출자 및 국외 북한이탈주민	상담, 학습지도, 1:1결연 기초생필품 및 의료지원, 청소년 계절학교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가양동)	사회배출자	체제적응교육, 복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이북5도지부	사회배출자	자매결연, 자선음악회, 장학지원
순복음교회(선한사람들, 굿피플대학)	사회배출자	창업교육, 생활보조금 지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직업재활지원
연세대학교인간행동연구소	사회배출자	상담서비스
영락교회(북한선교회)	수도권거주 사회배출자	생활상담, 신앙결연
이북5도민연합회	사회배출자	장학지원
이주난민선교회	사회배출자	자매결연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사회배출자	불우자 지원
좋은벗들	하나원 교육생, 사회배출자, 국외 북한이탈주민	해외체류자지원, 생활체험 심성수련프로그램

단 체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앙대 체제적응연구센터	조사과정 및 사회배출자	체제적응교육
천주교 민족화해운동본부	하나원교육생, 사회배출자	하이모 프로그램, 종교활동, 청소년프로그램
천일장학회 등	학교재학생	장학사업
청년여성문화원	사회배출자	결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바자회, 등 적응프로그램
통일민족건국회	사회배출자	영농정착지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회배출 여성	결연
하나로복지연구원	사회배출자	상담지원, 컴퓨터 교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외 북한이탈주민, 사회배출자	해외체류자지원,자매결연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배출자	사회복지사업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하나원교육생, 사회배출자	심성수련프로그램, 상담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배출자	위로행사, 마라톤대회, 바자회
한국 YMCA	사회배출자	결연사업, 지원활동
한민족복지재단 (고향마을)	정착촌 참여자	시범농장운영,영농정착지원고향마을 추진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사회배출자	명절위로행사
한적(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수도권거주 사회배출자	위로행사
행주치마운동본부	사회배출자	자원봉사
희년상담소	사회배출자	해외체류자 지원, 상담지원
이외 10여단체 활동 중		

출처: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2) 개선점

2003년 통일연구원의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72.6%가 만족(매우만족이 40.5%: 다소 만족이 32.1%)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의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정착단계에서 만족은 32.4%로 줄어들고, 불만족이 12.3%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3.5%였다.[35] 이와 같이 민간단체의 활동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학습 부족도 문제이나 정착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원 봉사 활동 또는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태도로 정책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전반과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관민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곧 정부와 민간단체들간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정착교육에 대한 공동 목표와 접근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의 하에 수립되어야 하겠다.[36]

정부가 앞으로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전문가 양성 등 전문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많은 역할을 위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센터의 설립을 고려해야 하겠다.

지역센터는 각 지방의 전문단체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원도 용이하게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개인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인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관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35]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p. 222~223.
[36]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p. 23.

(가) 취업에 역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에서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실업상태가 70% 이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의 직업 알선과 정해주는 곳에 취업을 의무화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및 현금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곧 취업에 최대역점을 두고 최소생계비 지급 이후 곧바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취업을 통해서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력 높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조기자립과 정착에 성공하고 있다.

(나)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착금 지원에서 본인들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줄이고 정착과정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원하여 정착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난민과 난민기관에 50:50으로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 지역사회복지관형 정착 프로그램 개발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타 기관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라) 북한이탈주민 관리 위한 매뉴얼 개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안내책자, 참고교재 개발로 기본업무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의 협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 정착 성공한 사례 활용

민간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성공적인 사례를 채용・참여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현재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조정 방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집중하고, 장년층과 노약자들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취업에 집중시키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을 치유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화과정을 촉진시켜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 증가와 이들의 실질적 사회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제의 보완과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지역담당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혹은 사회복지과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임명되어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내의 신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고용안정센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거주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체계가 원래 목표하던 바와 같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다른 업무에 부차적인 업무로 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임담당관제를 통한 인력확보 및 양성과 함께 예산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업무의 총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북

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관련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업무들을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정착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도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조사와 취적 및 주거지 배정 및 기초 법률지원을 토대로 지방단위의 지역정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37]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단위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이들의 가치 및 개성 존중, 자율권 존중, 수용 자세 등 전문적 가치를 갖고 사회복지 상담기법(개별화된 조언,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현행 사회복지체계상 각 기초자치단체내에 북한이탈주민 전담 사회복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담사회복지사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담복지사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공식적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 원조관계망에서 가용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와 원조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각 개인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8]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한 특별한 프로그램 개설보다는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착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후에는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

[37]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의 목표와 기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2004.7.9), pp.89~109.

[38]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강의자료, 2003. 10.

또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기본골격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비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 지급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노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자립을 유도하며 자활하여 시장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도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도 취업을 통한 자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 232개소의 자활후견기관들이[39]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자활프로그램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조건부과를 보다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구와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건부과를 유예하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엄격하게 실시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조건부과가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장기적으로는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취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착금은 생활안전비용, 취업지원비용 및 주거비용으로 대별한다. 생활비용에는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생활비지원을 의미하고 이것은 현재의 월최저임금 기준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월최저생계비로 산정하여 정착금의 규모를 줄여나간다. 1년 이후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초기 1년에는 월최저임금 기준방식으로 분할 지원한다. 2년차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최저생활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준액은 월최저임금 및 월최저생활비의 50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원방법은 세대별, 개인별 지원을 병행하고 지원

[39]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자활정보센터, “자활사업 국회브리핑 자료,” 2004. 8. 17.

내용은 현금과 대부제도를 활용한다. 궁극적으로 정착금을 초기생활안정비용(30%)과 취업지원비용(70%)으로 대별하고, 취업관련 모든 비용(정착장려금인 직업훈련, 자격취득 및 취업보호지원비 등)을 취업지원비용으로 통합 관리한다. 정착금의 잔여 예산을 취업지원비용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세대별로 1인에 대해서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원하여 취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취업지원비용에서 충당한다. 기타 유망기업창설과 장사 등은 은행대출을 장려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현행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단계별 지원체계가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 및 지역정착단계의 지원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지원이 하나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거주지정착단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거주지 정착단계에서 민간단체를 정착도우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인 정착도우미제도는 거주지 편입시 신병 인수부터 초기 정착을 위한 제반 안내, 편의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사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하나원 교육과 사회진출 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민간단체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역할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괄적인 연계시스템의 기본방향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수립하되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단

위 단체와 지역단위 단체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생활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을 연계하는 상담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하에 사회진출후 실질적인 지원역할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지역차원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에 상담센터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차원의 상담센터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단위의 상담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과 지역에 종사하는 상담담당자들의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방안

가. 단계별 지원체계 개선

(1) 정착지원시설단계

(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방을 통한 개선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방이 필요한 현실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년간 입국자 규모가 2000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생활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인원이 1만명을 돌파하고, 최근 대규모 일시 입국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와 같은 입국자의 규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작업이 요구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평가단계에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방을 위한 환경적 변화요인은 년 간 입국자 규모

1,000~2,000명으로 대규모화, 국내 생활 북한이탈주민 1만명 시대 돌입 예정, 일시 대규모 입국자 발생 가능성 상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입국자들은 북한 일반 주민의 통계학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연령, 성별, 학력, 직업분포에서 고른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과 취학대상자의 대규모 유입, 그리고 가족단위 입국자의 계속적인 유입 현상은 하나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식량난과 절대적 생존권 위협으로 탈북이 발생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경제적 곤란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계층에서도 탈북 입국 행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사회 정체성과 취업의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특성 변화내용은 입국자 연령의 고른 분포, 여성 입국자의 지속적 증가세 유지, 가족단위 입국자 증가, 취학대상자 증가세 지속, 입국목적의 변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도시에 벗어나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개방되지 않고 통제되고 폐쇄된 운영방식을 선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원 교육생의 교육 이수 태도와 필요성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정착 과정에서 교육효과가 실제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 후 민간이 운용하는 지원 및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폐쇄식 운영은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 애로, 사회정착시 교육 효과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유입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기능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사회적응과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과 지원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대규모 유입사태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성은 민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독 참여나, 민간단체와의 협동사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사회 주민들의 호의적인 수용적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와 대규모 유입사태를 한국사회가 담당해야하는 커다란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생산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 일반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적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민간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 결과 현행 하나원 운영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은 부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민간에 대한 개방성 확대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개방식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의 개방식 전환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교육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

체적인 유형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하나원 개방교육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원 시설에 대한 개방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민간인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하나원 자체 교육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시설의 견학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교육 비중을 높이며, 특히 부분적인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면회와 외출, 외박 등이 허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의 개방식 운영의 측면에서 사용될 경우는 사회적응 교육이 완전하게 개방된 일반 사회에서 자의적 선택방식으로 진행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사회정착 후 자신의 필요와 선택 또는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자신의 개별적인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별도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통제된 전용시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일반 사회에 개방되어 있는 시설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식 교육은 남한 일반인과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개방교육은 현재 방식의 하나원 교육과 사회 진출 후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응 교육을 연속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통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2+1 방식 또는 1+2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하나원에서 민간의 참여수준이 제고된 형태로 일정 기간 사회적응 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짧거나 또는 긴 후속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은 '2+1 또는 1+2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의 논의는 상황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첫째의 입장에서 개방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개방교육의 장점은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생이 한국사회와 일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개방된 형식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방된 환경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를 접촉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수하는 하나원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며, 민간의 전문인력과 시설, 민간운용 프로그램을 차용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용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 유입사태는 물론이고 일시 대규모 유입에 대한 대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방교육은 하나원의 통제된 운영을 상당 수준 해소 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육생들에 대한 면회와 외출, 외박의 허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으며, 외부교육과 활동의 증가로 역동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서 민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협력의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방식 교육은 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개방식 교육은 민간의 참여 확대가 기본 전제이지만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참여와 민간위탁 교육, 민간시설 견학의 증가 등이 현실적으로 용이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의 입지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원은 외부 민간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민간시설과 민간운용 프로그램의 위탁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성남의 여성 분원을 제외하고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본원의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개방교육은 교육생의 생활지도와 시설관리, 신변안전 확보, 민간단체와 전문인력의 선정, 위탁 프로그램과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관리인원의 증원과 운용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단체의 과도한 경쟁과 참여의지는 혼란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개방교육은 민간차원의 참여의지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면회와 외출, 외박의 허용시 이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와 브로커 등의 접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제시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원의 개방식 교육을 위해서는 '가급 보안시설' 규정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원 교육이 개방형으로 전환될 경우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의 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의 참여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간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접촉과 참여는 관리상의 문제와 상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를 창구로 활용한다면 교육생의 수료 후 사후관리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정착지에서 자신의 희망에 의해 주거와 교육공간이 분리된 형태로 적응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방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후 동선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은 입국 후 대성공사에서 단 기간 머물다가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을 수료하면 지역별로 정착하게 된다. 이것은 남한주민들과의 접촉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B. 점진적 접촉 증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은 한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접촉의 증대과정이다. 결국 이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접촉의 범위와 수준, 시기를 체계적으로 조절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사회와의 급격한 접촉은 문화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접촉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하며, 접촉의 대상과 수준은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접촉의 수준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기간에 점진적으로 사회 일반 주민, 특히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한 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선정은 현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와 대한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 전국 북한학과 대학 및 대학원생, 통일교육원 교육 이수자 등이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원의 개방형 전환은 필수적이며, 민간단체의 참여시기와 참여 프로그램의 선정은 이들의 심리적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즉 입소 초기는 종교단체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접촉을 알선하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접촉을 알선해야 한다.

C.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역할분담

하나원 교육의 개방형 전환과 효과적인 사회적응 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원 교육의 개방형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총괄적인 업무외에 하나원 소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치단체와 그 지역 민간단체의 협조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체계적인 지원을 얻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관협동형 모델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혼합형으로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심리적 안정 확보, 인력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이해 증진이라는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상호간의 접촉증대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민관협동형은 민간과 정부의 협동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북

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의지, 심리적 안정, 실질적 지원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더구나 정부주도로 인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동과 구체적 역할분담의 내용은 정부의 재정상태, 시설확보,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현황과 민간의 참여의지 그리고 국민정서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D. 생산적 기여자 양성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책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이들의 조기 자립 자활을 유도하여 한국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로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부담적 존재가 아닌 한국사회에 생산적 기여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과 하나원의 기능은 남한주민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정책적 저항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중 적극적 적응의지를 제고시키는 강좌를 신설하거나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 교육 프로그램과 진행의 특성화와 전문화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기능과 향후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의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착 후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안내와 정보제공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하나원은 실질적인 적응교육시설의 기능과 함께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원의 교육기능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 기초 이해 및 심리안정 기능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과목을 중심으로 세분화 할 필요 있다. 특히 민주주의 이해와 역사인식 이해,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비젼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원 교육 및 향후 사회교육을 위한 기본 검사자료 제공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심리, 진로, 직업관련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 및 정신 검사, 학습능력 및 흥미(청소년)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하나원 교육과 사회정착 후 실시되는 정부와 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기본적인 자료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사회적응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 및 민간 관련 기관 및 시설, 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활용교육이다.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의 목적은 한국사회 생활을 위한 최우선 필요항목과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충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민 보통교육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회적응 교육은 사회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와 민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적응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민간 적응교육 기관,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안내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응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정보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교육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원은 기본검사와 전문검사, 그리고 민간관련 기관 및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안내 관련하여 민간단체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민간 공모 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방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민간 공모를 실시한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민간 공모 목적은 하나원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능력을 제고시키며, 민간의 참여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민간 공모 사업은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A. 지원자격 및 권장사항

①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능력을 가진 민간단체, 연구소, 대학 등 관련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간 협동 컨소시엄 권장(산학연 협동, 지자체와 민간단체 협동 등)

③ 북한이탈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활동 단체 참여 권장

④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권장(남한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권장)

⑤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장(기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거나, 신규 연계 프로

그램 동시 개발 권유)

⑥ 장기간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확보 권장(동일 진행자가 장기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일회성 진행자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

B. 민간 공모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① 외부 위탁 프로그램(프로그램, 시설, 인력 제공 프로그램)

하나원 교육생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자체 시설과 인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현장견학, 기초직업훈련 등이다. 그러나 외부 위탁 프로그램은 숙식이 외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원내 숙식을 하면서 외출 또는 출퇴근형 교육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나원 시설, 인력 활용)

현재의 하나원 자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미한다. 즉 하나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새로운 강좌, 테마 등에 대한 교육 매뉴얼, 교육교재, 교육기법 등의 개발을 의미한다.

③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제공 프로그램(하나원 시설 활용)

현재의 하나원 시설을 활용하여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협동형 프로그램(하나원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기존의 하나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개편하거나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원 심리 및 진로지도, 생활지도 전문직원과 전임강사 등과의 공동개발과 공동진행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C. 선정기준 및 방법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민간 공모 사업의 선정과 평가작업을 위하여 가칭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위원회」를 하나원 자체 규정으로 설치한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하나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하나원장과 교육훈련과장, 교육훈련팀장 등이 참여하며, 민간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임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필요에 의하여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위원회」는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민간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선정, 교육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 외부 강사 심의 등을 담당한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임시회는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및 심의가 필요할 때 소집한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민간 공모 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실행가능성, 효과성, 경제성, 연계성,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Ⅳ-1>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민간 공모 사업 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배점	주요내용	배점기준	기타
실행가능성 <25>	적실성(5) (O · X)	높음(5), 보통(3), 낮음(1)	현실 적합성
	경험(5)	높음(5), 보통(3), 낮음(1)	운용경험
	인력확보(5) (O · X)	높음(5), 보통(3), 낮음(1)	전문성 수준 및 확보가능성
	예산확보(5) (O · X)	높음(5), 보통(3), 낮음(1)	자체부담비율 및 확보가능성
	시설확보(5) (O · X)	높음(5), 보통(3), 낮음(1)	자체확보비율 및 가능성, 적합성,현장검증
효과성 <20>	목표 달성 예상 수준(10)	높음(10), 보통(7), 낮음(3)	인력 및 사업 연속성
	적응력 제고 예상수준(10)	높음(10), 보통(7), 낮음(3)	
경제성 <15>	기존 프로그램 대비(5)	높음(5), 보통(3), 낮음(1)	
	자체 실행 대비(5)	높음(5), 보통(3), 낮음(1)	
	비용 적합성(5)	높음(5), 보통(3), 낮음(1)	
연계성 <10>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수준(5)	높음(5), 보통(3), 낮음(1)	
	사회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5)	높음(5), 보통(3), 낮음(1)	
발전가능성 <30>	수요 증대 가능성(5)	높음(5), 보통(3), 낮음(1)	
	협동형(5)	높음(5), 보통(3), 없음(0)	자치단체, 산학연, 기존단체협동
	통합형(5)	높음(5), 보통(3), 없음(0)	
	정책협조 가능성(15) (O · X)	높음(15), 보통(10), 낮음(5)	편중방지
합계 <100>		적실성, 인력확보, 시설확보, 예산확보, 정책협조가능성 (O · X)	

특히 실행가능성 항목 중 적실성, 인력, 시설, 예산확보와 정책협조 가능성 항목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모 프로그램은 선택될 수 없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민간공모 사업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원개발과 교육의 효과성 제공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공모 교육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은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부담(0~100%)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하나원내 전문인력과 협동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은 민간 프로그램 공모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 공모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교육생, 수료생, 진행자, 하나원 관리자에 대한 평가작업과 비용 편익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작업을 통하여 보완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공모 프로그램의 지속과 개편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동일한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여 자체운용, 민간과 공동운용, 민간위탁을 결정하며 프로그램의 확대와 축소여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임강사의 확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외부 민간공모와 함께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 강사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수하고 열정을 지닌 강의 요원을 투명하게 복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인 강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민간 공모를 통한 운영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됨으로써 교육생의 수요와 욕구 충족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다. 둘째, 민간의 시설, 인력이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설투자와 인력확보의 장애요인이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동 수준이 제고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상호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민간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시설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유입 사태와 다양한 계층의 유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적응 초기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력 제고와 함께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 민간의 참여수준이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외부 위탁 프로그램이 혼재됨으로써 전체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시간 배정, 원내교육과 원외교육의 조정 등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다. 둘째, 민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민간단체가 원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교육생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넷째, 민간인의 하나원 출입과 시설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특정 종교단체와 기존 민간단체들이 대부분의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독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섯째, 민간 공모 프로그램과 기존 하나원 프로그램이 상호 경쟁적 관계일 경우 기존 하나원 담당자와 갈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민간 공모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 시설이 적정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는 오히려 고비용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민간 공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D. 주요 공모 분야 예시

① 심성수련,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관련 프로그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또한 하나원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의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위탁 진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나 하나원 전문직원이 진행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과 남한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 방안의 필요성이 높다. 교육 프로그램은 1일 또는 3~4일 집중 프로그램이나, 8~10주간 정기적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② 역할극, 미술치료, 음악치료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 해소, 적극적 적응의지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진행하는 역할극, 미술치료,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협동형 프로그램과 남한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다.

③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요가 등 포함)

정규 교육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으로 함께 필요성이 있으며, 남한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전체 종합적 프로그램과 성별, 연령별 차등화된 복수형 프로그램이 함께 필요하다.

④ 자본주의 생활 적응(시장경제, 생활금융 등) 촉진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학연 협동형이 바람직하며, 성별, 연령, 희망직업별 복수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수의 프로그램을 혼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높을 것이다.

⑤ 문화적 이질감 해소 프로그램(자유 주제)

한국의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부 및 봉사단체, 북한학과 관련 대학원, 연수원 및 연구기관과 통일교육원 등 교육기관들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원내와 원외 프로그램이 모두 가능하다.

⑥ 주제가 있는 산업체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개별적 프로그램이 함께 요구되며, 남한주민과 함께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

⑦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이해와 정착의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농촌지역, 환경미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남한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그리고 협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⑧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또한 하나원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의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위탁 진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나 하나원 전문직원이 진행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협동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다. 교육 프로그램은 1일 또는 3~4일 집중 프로그램이나, 8~10주간 정기적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⑨ 홈스테이 프로그램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목적이며, 가족단위와 개인단위를 구분하여야 하고, 개인단위인 경우 성, 연령을 고려하여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대상자가 일정기간 동일한 가정이어야 축적된 경험으로 효과적인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 기존 가족이 사회에 정착한 경우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관리하에 기존 가정에 홈스테이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⑩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이 10주 이내에 수료할 수 있는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나원 또는 원외에 위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운전, 요리, 봉제와 함께 간병인 교육, 창업교육 등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완비될 경우 하나원 교육 시스템을 '2+1 또는 1+2 시스템'으로 전

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하나원에서 2개월 또는 1개월 기초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 한 후 민간 또는 정부와 공동 주관하는 기초직업훈련에 1,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⑪ 주제가 있는 남한주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한국의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부 및 봉사단체, 북한학과 관련 대학원, 연구기관과 통일교육원 등 교육기관들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대화를 진행함으로서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원내와 원외 프로그램이 모두 가능하다.

⑫ 사회정착 부적응자 및 체제부적응자 심화과정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 단독 또는 하나원 협동형으로 사회부적응자를 위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 하나원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전제

하나원 교육과 민간 공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제한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먼저 민간 공모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하나원 근무자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과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 공모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다수의 민간인이 하나원에 출입하게 되며, 잦은 교육생의 외부활동이 예상된다. 또한 민간 공모 프로그램은 하나원 기존 프로그램과 경쟁 또는 보완, 협동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전 이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 공모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재원에 대한 사전검토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공모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리허설과 진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 공모 프로그램은 효과성 검증이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민간측 진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민간 공모 프로그램을 포함한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일반 정착지원단체와 시설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직업훈련, 봉사활동, 심성수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취업능력향상 및 성취 프로그램, 미술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하나원 퇴소 후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3국 체류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하나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체류 국가에 따라서 이 기간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므로 하나원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입국전 단계에서 하나원 교육과 연계되는 사전교육 실시를 관계 기관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거주지 정착단계

2003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북한이탈주민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72.6%가 만족(매우만족이 40.5%: 다소 만족이 32.1%)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의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정착단계에서 만족은 32.4%로 줄어들고, 불만족이 12.3%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3.5%였다.[40] 이와 같이 민간단체의 활동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학습 부족도 문제이나 정착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원 봉사 활동 또는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태도로 정책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전반과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

[40]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pp. 222~223.

여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관민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곧 정부와 민간단체들간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정착교육에 대한 공동 목표와 접근방식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의 하에 수립되어야 하겠다.[41]

(나) 권역별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설립

정부가 앞으로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전문가 양성 등 전문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많은 역할을 위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센터의 설립을 고려해야 하겠다.

지역센터는 각 지방의 전문단체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원도 용이하게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개인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인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관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취업에 역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에서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실업상태가 70% 이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의 직업 알선과 정해주는 곳에 취업을 의무화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및 현금보상 제도를

---

[41]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p. 23.

실시하고 있다. 곧 취업에 최대역점을 두고 최소생계비 지급 이후 곧바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취업을 통해서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력 높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조기자립과 정착에 성공하고 있다.

(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정착금 지원에서 본인들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줄이고 정착과정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원하여 정착금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난민과 난민기관에 50:50으로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마) 지역사회복지관형 정착 프로그램 개발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타 기관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바) 북한이탈주민 관리 위한 매뉴얼 개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안내책자, 참고교재 개발로 기본업무의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의 협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 정착 성공한 사례 활용

민간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성공적인 사례를 채용・참여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지고 있어 과거보다는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와 보호기간이 과거 2년에서 현재 6개월로 줄어들고, 1:1 보호에서 1:5 이상으로 담당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일상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고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담당관 개인의 변수에 따라 변화가 많아 업무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긍정적인 평가는 낮아지고 있다. 하나원 조사의 심층면접에서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03년 통일연구원조사와 다른 점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은 보호담당관 중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통일부도 원칙적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보호담당관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마는 일년에 1~2번의 단합대회 정도 개최와 같이 업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에 주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주요 업무를 위임하는 사례가 많다.

하나원 조사에서 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경험은 71.4%로 나타나고 있어 취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빈약, 취업기회제한, 사회적 차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체가 힘든 사항에서 취업보호담당관의 기능과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층면접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나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신뢰도는 신변보호담당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이들과의 접촉 기회가 극히 적고, 신변보호담당관 선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과거의 사례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보호담당관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홍보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들의 장단점을 구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에는 임명과정에서부터 담당관에 대한 적성 및 성격 등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하고,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전문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지역사회의 다른 담당관과 민간자원단체들과의 업무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정착도우미는 신변보호담당관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원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동원하는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취업에 집중하도록 담당 기관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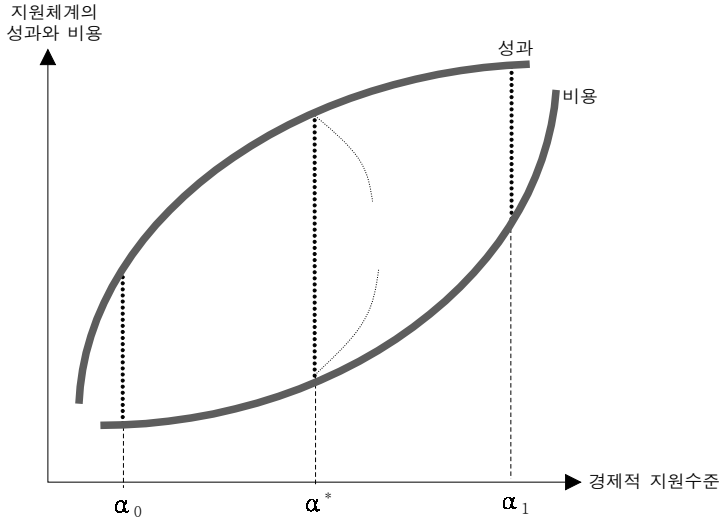
셋째, 보호담당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의 평가가 지원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기구(one-stop service)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사안별 지원내역 조정

(1) 경제적 지원체계

<그림 Ⅳ-1> 북한이탈주민 경제지원체계의 성과와 비용



<그림 Ⅳ-1>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성과와 비용을 '현체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수준'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동 그림에서 가장 이상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그에 따른 순성과 즉 "성과~비용"을 최대화하는 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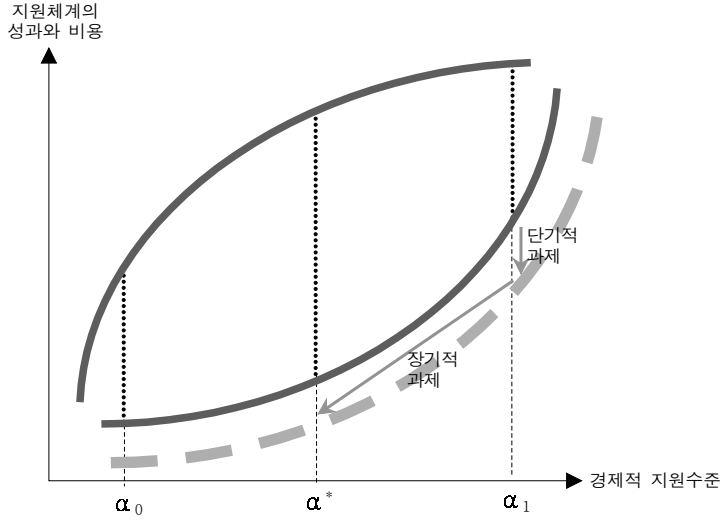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체계는 α^*가 아니라 α_1,(> 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장 결정적 증거는 정부 자체가 현재의 지원 수준을 가급적 하향하려는 의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새롭게 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위의 그림에서 성과와 비용 함수의 구체적

꼴(shape)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α^*를 찾기 위한 개선 방안이 오히려 α_0로 귀결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순성과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위의 그림에서 성과와 비용 함수의 구체적인 꼴을 확인하는 집중적 연구를 통해 α^*를 제공하는 체계를 찾는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수준 α_1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체계의 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현체계의 순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Ⅳ-2> 정착지원체계의 성과와 비용으로 본 과제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착지원개선안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줄이고 대신 간접적 지원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정부가 100원을 직접 주었다면, 이제는

50원만 직접 주고, 나머지 50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비용 또는 그 빌린 돈의 일부에 대한 지불보증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정부지원자금의 직업 merit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주거 지원자금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수 등에 따라 일률 지급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지원자금의 일정부분 만을 가족 수 등에 따라 일률 지급하고, 나머지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주가 "정기적인 소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만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정부지원자금의 지급 일정(schedule)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지급의 초기에는 많게, 나중에는 적게 지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자금 지급은 ①소득의 유용 ②근로의욕 저하 ③시장경제에서의 미적응 상태에서의 자금지출의 실수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자금 지급 schedule을 가능한 시기에 따라 균등하게 또는 뒤로 갈수록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용지원 체제를 확대하고, 동시에 민간을 통한 우회적 자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를, 북한이탈주민들만을(또는 주로) 고용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들만의 독자적 경제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2) 비경제적 지원체계

비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원실태를 볼 때 첫째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분야별 보호담당관, 지역협의회, 민간단체협의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야별, 지역차원, 중앙정부 차원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원 단계에서의 적응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하나원 교육과정에서의 개인별 적응과정과 지역사회 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력은 대부분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기존 남한주민을 상대로 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5년간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를 감안하여 이들 코디네이터가 5년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 직능단체의 참여를 보다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에 옮기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경제적 측면에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의 적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의 충원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심리, 진로 지도 등 일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위에 심리, 고충, 진로 등의 분야에서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최

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전담 담임제도를 활용하여 적응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경제적 지원체계의 경우 우선 정착시설교육인 하나원과 사회진출 이후의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사회진출 이후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사회진출 후의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때 양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비경제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원 교육과 사회진출 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역할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총괄적인 연계시스템의 기본방향은 북한이탈대책협의회가 수립하되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단위 단체와 지역단위 단체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생활상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을 연계하는 상담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하에 사회진출후 실질적인 지원역할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지역차원의 연계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에 상담센터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차원의 상담센터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단위의 상담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과 지역에 종사하는 상담담당자들의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종합생활상담센터에서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 상담대상자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많은 차이가 있어 상담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비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착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종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역단위 민간단체,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대상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로 하여금 남한주민에 대한 상담을 위한 전문성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 방안으로 통일교육원을 활용하거나 하나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단위 정착을 지원하는 보호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먼저, 본연의 업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보호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와 초기정착 지원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성향변화에 따라 신변보호업무도 개선하되, 초기정착지원 역할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인 정착도우미제도는 거주지 편입시 신병 인수부터 초기 정착을 위한 제반 안내, 편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

이들 정착도우미는 하나원에서의 교육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제로 이들이 사회진출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원에서의 심리, 적응상황에 대한 기록표를 작성하고 기록표를 인계하여 하나원과 지역사회정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 건강, 진로문제, 언어 등 초기정착단계에서의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인이 해결하는 동시에 각종 단체 및 분야별 문제에 대한 상담 전문가와 연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착도우미와 관

련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간단체가 주도하되, 전문적인 상담 및 정착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착도우미가 초기 정착을 지원한 이후 재정지원을 하는 5년 동안 이들의 정착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지역협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존중하되, 북한 내 학력, 경력 등과 남한 내 인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나원에 진로를 상담하는 직원이 있으나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업보호담당관은 현재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담관을 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취업구조 등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훈련기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이수 후 취업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제도를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 및 창업은 심리적 안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상담, 고충상담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학지도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종합생활상담센터의 일상생활 상담 중 진학 및 진로지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취업보호담당관이 진학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역단위의 교육청에서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학지도는 북한 내 학력의 문제, 학제의 차이,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한 정규교육제도로의 편입능력 여부, 무연고 청소년 및 무학력자의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진학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상으로 학력수준에 맞지 않는 고학력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등 부적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에 맞는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소규모 대안학교의 설립을 유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진학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재이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담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대폭 지방과 지역민간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인력의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원에서 교육을 실시해고 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상세한 지원안내 및 각종 기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택, 교육, 의료, 기초생활, 자매결연, 법률 등 각종 소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의료 상담, 가정상담 등 직능별 단체의

참가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기존의 분야별 지원체계와 연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의 증가에 따른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가족상담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경우 자매결연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각종 네트워크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네트워크 편입을 통한 정착지원의 역할은 지역협의회가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분야별로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전문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단처럼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춘 직능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에 대해 전문 분야별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의료, 건강상담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심리상담은 지방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만을 전담하는 전담사회복지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별 직능단체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 지원단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의 연계, 상호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집단별 지원체계 개선

(1) 청소년

(가) 전문화된 교육지원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취학연령기에 있기 때문에, 국내입국이후

에 학업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착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학업공백기간이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모나 가족들의 동반여부 등도 이들의 사회적응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연령, 나이, 학력, 중국 등지에서의 경험 등 기초적인 자료와 이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감당하여야 하였다.[42]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이들이 안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사회적응과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형태의 사회적응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심리상황을 감안하여 예상가능한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타문화권 이주청소년의 정착 등에 대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기존 청소년 단체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체계 참여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민간단체들의 지원사업의 경우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지원 단체들의 경우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주로 관여하던 단체들보다는 북한 및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를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문제와 별개로 접근하여 특별한 문제로 부

---

[42] 민성길,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과 시민의식," 남북청소년교류연대 북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토론회, 2004. 9. 3.

각시키는 경향을 보여 왔다. 물론 대안학교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추진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는 하다. 향후 북한이탈청소년 적응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단체들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그들의 또래문화와 집단에 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확립

북한이탈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착 초기단계에서부터 특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들은 탈북과정에서 가족의 해체로 인한 제3국 체류기간 및 북한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새로운 사회정착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을 스스로 감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과 같은 유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시설보다는 전반적인 조정체계 하에 교육과 생활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그룹 홈'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그룹 홈은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및 장애청소년 등의 경우에도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생활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무연고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이들의 정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의 관리자와 북한이탈청소년이 갈등을 겪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는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을 벗어나 생활하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현실이다.

(라)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양부모'와 같은 개념의 개별보호제의 경우에는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과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청소년 간의 실제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단위보다는 오히려 개별 청소년에 대해 여러 명의 후견인(mentor)이 협력하여 부분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후견인(mentor)은 생활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자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년배에 해당하는 학생 후견인(mentor)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있는 다수의 후견인(mentor)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학부모자원봉사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후견인으로 활동할 경우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 제도권 교육에 대한 보충체계 확립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하에 사립학교 형태의 북한이탈청소년대상 학력인정 특성화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특성화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로 하여금 제도권 학교교육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딤돌 학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3] 특성화학교는 동시에 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진로결정, 방황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재교육기회 부여, 무연고 청소년 교육 및 보호, 기술교육, 외국어 교육, 특기교육 등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특성화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특성화학교는 학교의 운영주체뿐만 아니라 관련활동을 전개해온 민간단체들의 참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성화학교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로 기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

[43] 이강락,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시사점,"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2004. 7. 9). pp. 11~17.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도권교육 편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하여 특성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등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격리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44] 따라서 무연고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학교 취학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특성화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안학교들은 학업지도와 생활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행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일반 후원금과 자원봉사제로 운영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전문교사 부족을 겪고 있다.[45]

이와 함께 제도권 학교 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중인 기존 대안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안학교들은 순수민간 혹은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순수민간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와 규모 등에 있어서 시범적 성격이 강하며, 종교단체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돕는 것에 관심이 많으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것과 아울러 정상적인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바)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이들과 유사하게 다른 사회로부터 이주하여 이 사회에 정착하여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 국내 거주외국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

[44] 이영석, 다리공동체,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 10. 10.

[45] 이영주, 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 10. 10.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을 북한이탈청소년 적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를 위한 ESL 프로그램이 단순히 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학습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과의 접촉(오리엔테이션, 학부모면담)을 통해 아이들의 적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ESL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학교단위로 개설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국 초기에 특별학교 방식(기숙사시설 학력인정학교)으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지역단위의 적응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학교는 단기로 운영하고 가족들과 같이 입국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조기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자원봉사 교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원이나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관련 자원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행태가 중국이나 하나원 등 보호기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관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청소년과 교사간의 인간적 갈등과 실망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주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아) 직업교육 유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정부의 대학진학에 대한 특례 및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수급 등으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인의 나이와 수학능력에 관계없이 북한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대학진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중도에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및 취업지원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육보호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교육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지원은 일시불의 형식보다는 직업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일정취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등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지난 2002년 이래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여성들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착지원체계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남한사회 적응 관련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은 대체적으로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이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적극 감안하여 기존의 정착지원체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계층별・연령별・입국유형별 특화교육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성 있는 과제라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 내지 문제의식으로 접근할 때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방안은 다음의 일곱 가지로 집약된다.

(가) 북한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 차원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

안 모색은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응 및 정착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몰이해 내지는 편견,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하나원의 교육 담당자와 민간 자원봉사자,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사회복지관 직원 등이 자신들의 탈북 및 입국과 관련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여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으로 자신들을 대하기 때문에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한 여성들 사이에는 동질성도 있지만 이질성도 적지 않다. 북한에서의 여성교육, 정치조직생활, 극심한 생활고 등은 북한여성의 이질화를 미루어 짐작케 하는 요인들이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한여성에 대해 그릇된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와 같은 그릇된 통념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및 정착문제를 논함으로써 이들의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자는 "북한여성들의 남한 내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46]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순조로운 사회적응 및 정착 방안 모색은 북한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여성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은 북한이탈여성의 정체성에 타격을 가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 내지 자아정체감의 상실을 겪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어렵게 하는 중대 요인이다. 따라서 하나원 내 북한이탈여성 교육담당자와 민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사회편입 후에 만나게 되는 관련 보호담당관, 유관기관·단체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북한여성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며 이를 통한 북한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및 정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46] 이새롭, 「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150.

북한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과 관련해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남한사회에 편입되기 전까지 북한이탈여성들이 지녀 온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 내지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하나원 교육기간에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주민들, 특히 남한여성들과 만나 자리를 함께 하여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편입 후에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를 활용하여 남한여성들과 북한이탈여성들이 만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은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며 남한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남북한간 문화적 동질성 및 대등한 관계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나) 북한이탈여성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한 사회적응 및 정착 도모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남한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는 이들의 입국 때부터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며 이들 또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남한주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내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남한주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삶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며 이는 곧 사회부적응이라는 현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부적응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적응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적응시켜야 할 대상으로 객체화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스스로 적응을 모색해 나가기보다는 사회적 요구 내지 통념을 의식하며 자신을 남한사회에 적응,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내지 자아정체감 상실을 겪게 되며 이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주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잃고 사회 적응 및 정착에 회의적·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47]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순조로운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을 적응, 동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 스스로 적응을 모색해 나가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테면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남한사회에의 적응 및 정착의 당위성과 부적응의 결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왜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하며, 왜 남한사회에서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고, 왜 능동적·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스스로 적응 및 정착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체성 확립 내지 자아정체감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을 장려하기보다 만류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여 사회적응 및 정착을 도모한다고 할 때 이들에 대해 대학진학을 적극 장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북한에서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진학이 출신 성분에 따라 좌우되며, 남성중심의 사회이므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대학진학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대학진학을 못했던 학구열이 높은 북한이탈여성의 경우에는 남한사회 편입 후 대학진학에의 욕구가 매우 강할 것이며, 이와 같은 욕구를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적응 및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직업훈련의 확대, 강화를 통한 취업 및 안정적 수입 보장

북한이탈여성의 취업률, 취업형태, 취업경로, 직종, 월평균 수입 등으로

---

[47]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 부적응과 관련해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자신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참조.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취업경로와 관련해서 보면 이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 있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8]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식량난이 악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을 통해 나름대로의 기술과 능력을 쌓았으며 식량난이 악화된 이후로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극 경제활동을 하는 등 강한 생활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북한에서의 경력에 대해 북한이탈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적성과 북한에서의 직업・직장경험을 고려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알선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남한사회에 편입되어 사는 북한이탈여성들 중에는 단독, 또는 한 두 명의 자녀와 생활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며 남편과 동반 입국한 경우에도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해나가는 여성들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의료보호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개인의 적성을 비롯해 북한에서의 학력 및 경력(직장경험), 연령 등 개인차를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의 확대 및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에 있어 이른바 여성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종을 북한이탈여성들에게 개방하여 이들 스스로가 원하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여성은 미용, 요리 등과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기 쉬우니까”라는 식의 권고에 따른 직업훈련 종목 선택보다는 다양한 직종 및

---

[48] 한 관련 조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응답자의 22.0%가 남한사회에서의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답하였으며 50.0%가 ‘보통’이라고 답함으로써 인정도 부정도 아닌 불명확한 반응을 나타냈다. 위의 책, pp. 257~258.

여성 취업 실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기회 및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기술 습득 이후 직업훈련소와 해당 사업장을 연계해 주어 실제 직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인턴제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49]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훈련의 실효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을 대비한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법, 직장문화 등에 대한 숙지 등을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제고를 꾀하는 한편 이들의 구직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취업 기회 발생 시 사업장과의 즉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의 취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욕심내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화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서민생활 현장 실습을 통해 남한주민의 평범한 삶을 체득하며 쪽방 생활 독거노인 돌보기,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등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화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와 제3국 체류기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 편입 후에는 내・외적인 부적응 요인들로 인해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보다 더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기간

---

[49] 이새롬, 『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각주 90 참조.

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로써 사회 편입 후에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원 내에 상담 전문 인력을 확충, 강화하며 사회 편입 후에는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사회 편입 후에는 지역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상담 및 정보 제공 역할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또한 하나원에서의 심성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여성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는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며, 전문성을 확보한 여성 직원의 충원을 확대하여[50] 이들과의 일상적 접촉 및 대화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2003년 실시한 조사결과[51]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의 70%이상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종교생활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또는 제3국에 두고 온 가족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관련해 종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나원 내 종교시설 및 성소모임을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여성들의 입소 직후에 모든 종교시설 및 성소모임을 이들에게 개방하여 이들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원 교육생들과 만나는 각 종파의 성직자와 수도자는 선교 내지 포교보다는 교육생들의 심리적・

---

[50] 하나원 여성교육생의 비율이 60~7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목표와 기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2004. 7).

[51]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종파적 입장을 초월해서 종교시설 및 성소모임을 개방하며 타종교를 배척하는 말과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종교를 만나는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종파간 갈등 내지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원 내에서 특정 종교의 신자가 된 북한이탈여성은 퇴소 이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에 위치한 해당 성소와 연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이질적 사회에 편입됨으로써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내지 피해의식, 또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독거노인가정, 행려병자 수용시설 및 병원, 노숙자 급식 현장, 소년·소녀가장 방문 및 봉사활동도 의의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감동을 주고받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52]고 하며, 또 다른 관련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이 그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53] 남한여성들에 대한 문화적·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남한여성들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들 간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 남한사회의 의생활,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탈여성과 남한여성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의생활, 식생활에 대한 남북한간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

52 이부미, "탈북 가정생활을 통해 본 젊은 부모들의 남한사회 초기 적응," 『다가서는 남과 북, 만남과 공존의 모색』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2004. 6. 25), p. 113.

53 이순희, 「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사회적 지지였으며 사회적지지 제공자로서 양부모 여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특히 양부모와 같은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연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5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어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적응을 돕는다고 할 때, 독신, 또는 자녀와 함께 탈북 하여 입국한 여성인 경우에는 남한주민과의 양부모 결연이 사회 적응 및 정착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마) 부인과 질환 및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전문가 진단・치료와 연계 치유

북한이탈여성의 건강 관련 연구조사결과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3~4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질염, 골반염 등의 부인과 질환과 탈북과정 및 제3국 체류 기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상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원 입소 직후 모든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관련 전문 의료진에 의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하나원 생활기간에 집중 치료하여 완치토록 하며, 퇴소 후에도 정기 검진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발 및 전염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특히 중국 체류 기간에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비롯해 매매혼, 또는 사실혼의 관계에서 남편과 시댁식구들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생활기간에 이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집중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응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이 장애

---

[54]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은 난민들 사이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충격의 대안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5), pp. 3~4.

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인 바,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 또는 제3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남한 내 무연고 내지 사회연계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한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울증이 정신질환의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원 입소 직후 모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역할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역할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케 하며 역할극에서 나타난 이들의 심리적 갈등 내지 고통 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하나원 퇴소 후에도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가 상담체계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울증, 또는 절망감 내지 자포자기의 심정 등으로 인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자살충동 억제 및 자살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4시간 상담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전문의,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체계를 수립하여 퇴소 전에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알려 주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원 교육기간에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 여성 건강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위생관리, 운동의 중요성,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등을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숙지시키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몸에 익히도록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질병 진단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원내의 전문인력 보강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체계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가정생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가정이 결혼유형 및 가족형태에 있어 다양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55]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가정생활 지원은 이들의 결혼유형별, 가족형태별로 세분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여성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은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A.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 지원

가정생활에서 북한에서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를 고집하며 아내와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남편과 남한사회 편입이후 북한에서와 같은 세대주 중심의 가족관계에 대해 회의적 내지 저항적 태도를 나타내는 아내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 및 불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해체를 겪는 북한이탈여성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기간에 이들의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퇴소 후에도 전문 상담기관 활용, 또는 지역 사회복지관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이들의 가족관계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먼저 부부관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여성 부부간 대화의 장, 남한여성 부부와의 만남의 장, 남편과의 갈등 양상이 유사한 북한이탈여성들 간의 체험 나누기, 부부간 입장을 바꾼 역할극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부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대화

---

[55] 조영아, "탈북여성들의 남한적응 특징과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가 심포지움, 2004. 2. 5.

의 장, 남한가족과의 접촉 및 교류 등을 포함시키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을 가족 스스로가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남한 가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포함시키어 북한이탈여성의 가족들로 하여금 남한가정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는 특히 남편 내지는 아버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 및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로 인해 재혼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자녀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재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탈여성들의 결혼유형 및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문제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양상이 다양화하고 있는 바,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지원체계(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역할 및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B. 자녀 교육 지원

취학 연령, 또는 초·중등학교에 편입해야 할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은 기본적인 관련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한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 열풍을 이해하지 못해 매우 당혹스러워한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남한사회에 적응, 정착하기 바빠 자녀교육에 할애할만한 시간적·경제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이와 같이 초·중등학교 공부를 시켜야 할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원 교육기간에 초·중등학교 교육 관련 정보 및 지식 제공과 함께 수차례의 학교 수업 견학 및 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남한의 교육 내용 및 방법, 학습 분위기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남한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사회 편입 후에는 이들을 대학생, 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체계와 연계하여 자녀의 방과 후 보습을 도움 받으며 그 과정

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남한의 청소년 학습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보습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을 담당하는 각급 학교 교사들의 북한이탈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학습지원 자원봉사자들과 각급 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사) 바람직한 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 강화

남한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여성들 가운데는 가출, 또는 이혼 후 탈북하여 중국 체류기간에 매매혼, 또는 사실혼의 관계를 경험했거나 인신매매, 성폭행 등을 경험하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닌 여성들이 적지 않다. 또한 제3국 체류기간에 매매혼, 또는 사실혼관계를 통해 신변안전과 생계유지를 꾀했던 북한이탈여성의 일부가 남한사회 편입 후에도 사회 적응 및 정착을 보다 순조롭게 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이혼에 이르고 마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 및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남녀관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적응상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동거하였거나, 국내입국이후 북한이나 중국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모르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새로운 결혼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 부담을 안게 된다.[56]따라서 하나원 교육기간에 바람직한 성과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임신, 낙태, 피임 등과 관련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부모로서의 책임감, 모성,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관

---

[56] 문흥안,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이혼・재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2004. 7. 9). pp. 1~28.

련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일반론보다는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북한여성들이 피상적으로만 접하게 되는 남한여성들의 가정생활, 부부관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남한 남성과의 분별없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위의 일곱 가지 방안 외에도 북한이탈여성의 순조로운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언어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이들의 대부분이 남한의 이질적 언어로 인해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문제는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및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더하는 바, 남한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들이 취업 및 직장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원 교육기간에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들의 언어적응을 지원하며 퇴소 후에는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의 언어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노인

(가) 노인집단의 특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탈북노인이 증가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연령계층이 아닌 부양계층으로서의 남한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57]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매우 다양한데 경제적

[57]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적 ·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이후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요인

으로 첫째, 경제적 영역과 관련하여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한 다음세대의 연금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점 둘째, 노령인구는 젊은 세대에 비해 보다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측면 셋째, 이러한 현역 근로세대의 부담가중은 집단 근로 약화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58]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활용을 적절히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활용은 각 국가의 정치 · 경제 사회적 현실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수하게 많고 각 변인의 중요성 역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한의 노령화 추세[59]를 보면 평균수명의 경우 1960년에 남자 51세 여자 54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71세와 79세로, 2020년에는 75세와 82세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아도 1960년에는 3.3%에 불과 했던 것이 1990년에 5%, 2000년에 7%, 2020년에 1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등의 요인은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증가시키게

으로 주목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90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12.5%이였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1998).

58 노령인구의 증가가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은퇴연령상향조정,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의료비의 본인 부담 증가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전체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59 한국에서도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면서 노인문제는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노인계층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전 노인 인구층의 전반적 생활문제로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점검과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9%로 나타난다. UN에서 정한 노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는 사회)는 2000년도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UN에서 정한 노령사회는 2019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가파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관련되며 이는 노인부양지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된다. 또한 노인부양지수, 즉 경제활동 인구 층이 비경제 활동인구 중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켜 나가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특히 노인계층의 증가추세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기존 노인복지제도와 탈북노인 지원책

A. 노인건강보호

구 분	사 업 내 용 ('03년)	현 탈북노인의 적용
의료급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2,3종의 형태로 일정기간간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찰,치료등 의료혜택을 지급	특례적용 :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보호기간 등을 제한하지않고 지정기관에서 의료혜택
무료건강 진단 실시	○ 진단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노인 ○ 진단기관 :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보건의료기관 ○ 진단항목 : 1차 12항목, 2차 28항목 ○ 계획인원 및 예산 : 36천명, 686백만원 (국고 468백만원, 지방비 218백만원)	적용
요양시설	○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 173개소 - 8,086백만원(국고 50%) ○ 노인전문요양시설 : 123개소 - 52,782백만원(국고 50%) ○ 실비노인요양시설 확충 - 28개소, 28,304백만원(국고 50%)	미적용
공립치매 요양 병원	○ 시.도립치매요양병원 지원 - 34,830백만원(국고 50%) 신축(9개소), 증축(4개소), 장비보강(11개소)	미적용

B. 경제적 지원

구 분	사업내용 ('03년)	현 탈북노인의 적용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20년가입(기타노령연금 도최소10년)후 60세이후 일정금액을 월지급	특례적용 : 99년입국한 50세이상 60세미만의경우에도 5년이상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 월지급

구 분	사업내용 ('03년)	현 탈북노인의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 장	생활이 어려운사람을 정해진 보호대상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매년 선정하여 생계비 등 보호지원	특례적용 : 거주지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수급권자 대상
자활지원 사 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에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훈련, 일자리등을 제공	특례적용 : 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이면서도 자활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경로연금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노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월 45-50천원, 저소득노인 월 35천원	적용
노 인 공동작업장 설 치	○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중심으로 설치확대 599개소('03년) - 지원액 : 신설 작업장당 600만원 (국고 30%)	미적용
노인 인력지원 센터 지원	○ 전국 29개소 운영 ○ 지원액 : 148백만원/개소/년	미적용
노인 취업알선 센터 운영지원	○ 지원대상 : 70개소(420백만원) ○ 지원액 : 50만원/개소/월(국고 100%) ○ 인센티브제 도입 : 03. 7월부터 - 우수센터(10개소) : 월30만원 추가 지원 - 장려센터(20개소) : 월20만원 추가지원	미적용

C.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구 분	사업내용	현 탈북노인의 적용
재가노인 복지사업 확 대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 : 120개소 - 운영비 지원 : 89~91백만원/개소 ○ 주간보호사업 확대 : 116개소 - 운영비 지원 : 59~61백만원/개소 ○ 단기보호시설 확대 : 31개소 - 운영비 지원 : 68~70백만원/개소	적용 :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지역별로 개인가구별 실시
경 로 당 지 원	○ 지원내용(국고 50%)-43,243개소 - 운영비 : 44천원/개소/월 - 난방비 : 300천원/개소/년	미적용 : 지역사회적응부족등으로 비활성화

구 분	사업내용	현 탈북노인의 적용
노인복지 회 관	○ 설치개소 : 120개소, 8,189백만원 (국고 30%)	미적용 : 지역사회적응 부족등으로 비활성화
경로우대 실 시	○ 공영업종 - 지하철,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은 전액 무료 - 철도는 통일호 50%, 무궁화호 30% 할인 ○ 민영업종 - 국내항공기 10%, 국내여객선 20% 할인 - 교통수단 이용요금 지급 분기별 21,600~46,200원 - 기타 목욕, 이발 등은 업체자율 실시	적용
노인 부양 가족 지원	○ 노인인적공제 - 기본공제 : 연 100만원(소득세법 제50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 55세) 이상인 자 - 추가공제 : 연 50만원(소득세법 제51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 60세(여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2년이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생계형저축 비과세 : 1인당 2천만원(조세 특례제한법 제 88조의2) -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	미적용 : 홍보부족등으로 비활성화

(다) 평가

북한주민의 탈북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특히 가족단위 및 여성, 노인, 어린이등의 다양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보호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방안 논의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진다.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적응도나 경제적 생활실태, 사회적 동화정도에 관해서 성별, 가족단위별, 연령별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특히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들을 한국사회의 편견, 신변보호, 취업, 결혼, 제3국 체류경험, 학력 및 경력의 요인들을 선별 분류하여 심층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나갔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

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통일이후의 사회통합방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노인집단의 지원 체계 검토에 있어서 몇 가지 측면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집단별 사회적응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단위 및 노인 등의 다양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의 보호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적응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즉 노인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고, 생애주기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과 기대사항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적응접근 방식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조사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60대는 취업 등의 문제보다도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탈북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어려움, 수입원의 부재, 가족의 신변불안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고 있다. 이러한 노인계층별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응 방안에 대한 모색이 나오길 기대한다.

둘째, 지원체계에 있어서 정부의 기존정책의 연계방안의 도출 필요하다. 노인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증가와 입국동기의 변화에 대비한 정착지원 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의 기존정책의 연계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 및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연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 생계급여를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 실제 생계급여의 삭감이나 중단을 염려하여 직업훈련 및 정규직 직업을 망설인다는 의견도 개진되어졌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의지를 막는 것으로 시급히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골격은 소비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지급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노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자립을 유도하며 자활하여 시장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

향이다. 실제 90%이상의 탈북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자활정책에 참여하는 빈도는 10%미만인 실정에서 생계급여의 본래적 의도와 다르게 특별사항 및 예외를 두어 지급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하다면 긴급구호, 재해구호의 형태로 초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골격에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탈북노인 거의가 자의적 의도로 탈북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잘살아 보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실제 높은 생활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개별적으로 세워나가고 지도해 주는 정책으로 정착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한사회적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탈북노인의 개별적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호담당관 제도에 있어서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는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 지지가 되고 있다. 한편 거주지보호담당관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의 약1/10정도의 만족분포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맡고 있으나 이들의 기초생활수급업무 또한 과중한 현실에서 탈북노인 만의 개별적 거주지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법인의 지역별 지정을 통하여 전문사회복지사가 거주지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전담 해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탈북형태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단위의 탈북은 대체로 결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손자녀와 부부,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부부와 아들 및 손자녀 등의 형태를 띄는데 이러한 결손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온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응이 수월할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남한사회 적응, 특히 경제적 적응이 별다른 영향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서로가 해나갈 수 있는 지원 유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이 부담스러운 체계가 되

어서는 안되며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탈북노인에 대한 현재의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입국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안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탈북 사태가 국제적 사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외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북한인권법안의 상하원 통과와 동남아체류 북한이탈주민 468명의 집단입국 및 중국 내 외교공관 진입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증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향후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부터의 새로운 탈북은 차치하고라도, 중국 내 상당기간 체류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한 특별기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집단입국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이탈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착과정에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급증하는 입국규모에 대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지방정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정착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실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뿐만 아니라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험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사회정착과정에 가족들의 신변보호 및 입국지원이 상당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으로 인해 야기되는 신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지역주민, 직장 및 학교의 관련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성윤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교육원, 2003.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 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Agresti, Alan.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wiley-Interscience, 2002.

2. 논문

국회통일외교통상위.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1998. 10.

김선화. "미국 난민정착지원시스템의 북한이탈주민 적용을 위한 제안."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

문흥안.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이혼・재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2004. 7. 9.

민성길.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과 시민의식." 남북청소년교류연대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토론회. 2004. 9. 3.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 『200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회고와 전망』.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동계 심포지움(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2003. 12)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강의자료, 2003. 10.

_____.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의 목표와 기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2004. 7. 9.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한국사회학』. 제33집(가을호, 1999)
이강락.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시사점.”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세미나. 2004. 7. 9.
이부미. “탈북 가정생활을 통해 본 젊은 부모들의 남한사회 초기 적응.”『다가서는 남과 북, 만남과 공존의 모색』.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2004. 6. 25
이새롭.「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소래.「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이순희.「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이영석. 다리공동체,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 10. 10.
이영주. 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 10. 10.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전우택 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민성길 외.『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전우택・윤덕용.『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보고』.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12.
조영아. “탈북여성들의 남한적응 특징과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가 심포지움. 2004. 2. 5.
최보선. “탈북 주민 문제와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통일경제』. 제26호. 1997. 2.

3. 기타자료

『문화일보』.
『세계일보』.
박찬숙의원 발표 국정감사 자료. 2004. 10. 5.
오혜정, 이신중 수녀님. 통일연구원에서 인터뷰시 증언. 2004. 8. 20.
통일부 정착지원과. 정착금제도 개선. 2004. 7. 23.
_____.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2004. 4.
통일부. 2002 남북교류협력 추진실적(종합). 2002. 12.
하나원 설문조사. 2004. 5.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설자활정보센터. “자활사업 국회브리핑 자료” 2004. 8. 17.
http://www.unikorea.go.kr/

부 록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성과 목록

1. 학위논문(석사, 박사)

발표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4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비교정치 전공
1995	심진섭	남북통일과 남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심리학 전공
1996	김승용	북한 귀순자의 직업 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연구: 탈북벌목공 직업교육훈련사례 중심으로	숭실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혜정	귀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 공공정책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학과 북한특수 전공
	윤양중	탈북·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학 전공
1997	김광렬	탈북자 실태와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통일정책학 전공
	김경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박동순	북한탈출동포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통일정책학 전공
	신수정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규정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치외교학 전공
	오준교	탈북주민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민족통합을 향한 거시적 접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 및 지역학 전공
	이규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및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법학 전공
	이성재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 탈북동포의 법적 지위와 그 처우방안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학 전공
	이수원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일반행정 전공
	정완출	귀순북한동포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정해동	북한이탈자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행정학 전공

발표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8	강구섭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교육학 전공
	김명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행정학 전공
	박선경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청소년복지학과
	박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안전보장학 국방관리 전공
	박희정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손주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정치학 전공
	이강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소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학 전공
	이순희	탈북귀순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정책학 전공
	정유선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류학 전공
1999	김은경	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학 전공
	김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학 전공
	김정미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임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학 전공
	김종남	탈북자 사목을 통한 북한 복음화 방안 연구	수원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실천신학 전공
	김진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방안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통일정책학 전공
	김학성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책학 전공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사회학 전공
	박정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방안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중소기업학 전공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오운학	귀순자들의 세계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총신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전문인 사역 전공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9	이득우	북한 정치체제의 위기에 대한 연구: 북한이탈 점증사례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학 전공
	이순곤	북한이탈주민의 방송시청양태와 방송의 사회적 지지기능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임경택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복지행정학 전공
	조서영	재외(在外)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학 전공
	황지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인의 보건영양상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식품영향학 전공
2000	강덕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길강섭	북한이탈난민의 귀환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안보정책학 전공
	김순태	탈북귀순자 면접을 통한 대북한 심리전 전략 분석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책학 전공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국제법 전공
	박신호	'주체사상화'된 북한주민 선교방안 연구: 중국의 탈북자를 중심으로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교육문화정책학과
	신예정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학 전공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개학원 석사학위논문/일반행정학 전공
	양수려	재외탈북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국제관계학 전공
	유경선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법학 전공
	이철순	탈북 귀순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기대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상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통일정책 전공
	임정규	한국의 탈북자정책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아태지역학과
	정병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정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국제관계 전공
	조규병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법학 전공
	조기연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선교 전략 연구: 국내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선교학 전공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1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심리학 전공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인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정치학 전공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임상심리학 전공
	구봉희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에 관한 연구	천안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행정학 전공
	권혁신	탈북자를 통한 6.15 이후의 분한선교의 과제	장로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신학전공
	김광호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경찰 역할 중심으로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경찰행정학 전공
	김성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행정관리 전공
	김영암	탈북자들의 기독교에로의 희심에 관한 연구	계명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목회학 전공
	김 혁	탈북자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일반사회교육학 전공
	박선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책 전공
	박영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법학 전공
	신헌섭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승용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학 전공
	유경선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관	탈북자의 직업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숭실대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교육문화정책 전공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사업학 전공
	유창규	탈북이주자의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독정부의 구동독이주민 관련대책 및 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노동정책학 전공
	이강우	북한이탈주민의 교회정착을 위한 연구	합동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신학 전공
	이연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치학 전공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1	임영홍	남한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상익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선교전략 연구: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협성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선교학 전공
2002	김경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김병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 및 국제지역 전공
	김영미	탈북 유아의 남한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 탈북자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국제법 전공
	김한목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적 대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교육행정학 전공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송정복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정착지원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연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안진미	조선족을 통한 재중 탈북자 선교전략	고신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현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 한국교회의 역할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선교학 전공
	이성재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특수 전공
	이새롭	북한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여성학 전공
	이승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NGOs의 활동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치외교학 전공
	이진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북한 및 국제지역 전공
	정연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임두환	탈북자 대상 치유선교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선교신학 전공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2	조상혁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현황과 지원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치학 전공
2003	김문영	탈북자와 동북아 국제질서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정치외교학과
	김은주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연구: 2002년도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눈문
	김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정책학 전공
	박성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경험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눈문
	성미영	청소년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도덕、윤리교육전공
	오난희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임상심리학 전공
	오태권	탈북자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미선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 가능성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법학 전공
	유광현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민간차원의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눈문
	이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독일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국제정치 전공
	이영순	국내 탈북자들의 복음화를 통한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 유지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이혜경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사회복지 전공
	조영아	남한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주민 및 재한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용탁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학과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심리학과
	최성숙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청소년복지학 전공
2004	고태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응 방안	수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복	중국 체류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4	김규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만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화순	북한사람 남한에서 성공하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 3년간의 직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이예령	재중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와 그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	대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병범	재중탈북자의 인권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태정규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성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미희	국제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연구보고서

발표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5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금순	북한탈출주민 대책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1996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이금순	탈북주민의 국내정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이만식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통일원
	이정우 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우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원
1997	김진윤 윤여상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1998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대책방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999	이금순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한만길 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박현선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오기성 외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방안 연구	통일부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부적응문제 조사 및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통일부
20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 방안 연구	통일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관련 자료와 입국자의 특성별 통계	통일부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1	윤여상 김임태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의 인식과 업무실태 및 개선방안: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나원
	정경일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기영	하나원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생 사회적 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2002	오기성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방안 연구	통일부
2003	김임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개발 방안 연구	통일부
	강일규 고혜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률개발원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의 적정지원수준에 관한 연구	통일부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정병호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3. 세미나、학술회의、심포지엄、학술회의 발표논문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6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
	제성호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난민·귀순자들의 법적문제	「사회과학논총」 9.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형사정책연구원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덕수 신광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방안 연구	「논문집」 제4권 제1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영숙 외	탈북자 면접을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식품섭취 실태 탐색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3.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신율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고찰: 동독 탈출 주민의 사회적응 문제의 고찰을 통한 탈출주민의 사회적응 대책 개선을 위한 소고	「통일연구」 2.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윤덕룡 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권 2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이금순 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제성호	대량탈북자 발생시 공법적 대응	「법제연구」 12.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태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법학논고」 제14집
	윤여상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조용관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학보」 제23집. 북한연구소·북한학회
1999	김동배 이기영	민간기관의 탈북자지원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1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민성길 외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5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9	박미석 정승원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시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성곡논총」 제30집. 사단법인 성곡학술문화재단
	서일 이윤환 외	중국 내 북한 난민 건강실태	「통일연구」 제3권 1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성기중 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3집. 한국동북아학회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한국사회학회
	이기영	NGO와 정부의 연결관계의 모색: 탈북자 정착지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학」 37. 한국사회복지학회
	정기선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연구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홍석경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및 문화수용을 통해 본 통일 이후의 방송전략	한국방송학회 주최 1999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김찬규	탈북자의 강제송환	「북한법연구원」 제33호. 북한법연구회
	문숙재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서윤환	「탈북자정착지원종합센타」설립 및 운영방안	「북한학보」 25.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윤인진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104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윤인진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 부적응 상황	2000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제18호.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이범웅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실태 연구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정책」 제39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인천대평화통일연구소
	이상만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평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4,2. 북한연구학회
	이차영	남한 이주 북한인의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제12호. 대한교육법학회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1	독고순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35집 1호. 한국사회학회
	이기영 성향숙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7호.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계간사상」 제49호. 사회과학원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한국동북아학회
	임채완 최영관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6호. 평화문제연구소
	장혜경 김영란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여성연구』제60호. 한국여성개발원
	제성호	탈북자 정착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적응지원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3호. 중앙법학회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11집.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2	김군식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대량 탈북시 군의 대비방향	「군사평론」제359호. 육군대학
	박순영	탈북자 인체측정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 수준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5-1. 한국문화인류학회
	박현선	탈북자 국내 정착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1호. 북한연구학회
	윤여상	탈북자 적응에 관한 '태도변용이론'의 적용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대한정치학회
	이금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과제 및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제문
	정경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정진경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제21집 2호. 한국심리학회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	북한이탈주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통일연구원
	조용관	탈북자 실업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공안연구』 제14권 제5호 통권 제74집. 공안문제연구소
	한인영 이소래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제10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홍규덕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아시아여성연구」 제41집.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3	강권찬	기획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제10호. 한국민족연구원
	김현주	탈북 청소년의 공교육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성심사회학」 제8집. 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
	서미옥 김현아	탈북 청소년의 노래와 놀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한국아동학회
	안혜영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국립보건원보」제39권
	윤여상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2호. 대한정치학회
	윤여상 (경남대학교)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1호. 대한정치학회
	윤황	국내의 북한이탈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방안	「북한학보」 제28집. 북한연구소・북한학회
	이기영	남한거주 탈북자 부부의 사회적응 측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2집. 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이새롭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제54차 회의 발제문. 2003 4. 14.
	정태연 외	탈북자가 본 북한의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3권 3호. 한국노년학회
	정병호	탈북아동・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대응방안	200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발표논문
	황진수	북한이탈주민 참여복지 실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48차 회의 발제문
	정태연 외	탈북자가 본 북한의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남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3권 3호. 한국노년학회
	정병호	탈북아동・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대응방안	2003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발표논문
	조용관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	「공안연구」 제15권 제4호 통권 제79집. 공안문제연구소

발표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4	김영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재사회화문제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김현아	북한이탈주민의 품행장애 행동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민성길 외	탈북자의 삶의 질 연구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박순영	탈북자 신장과 북한의 생물학적 복지수준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의 목표와 기능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이부미	탈북 가정생활을 통해 본 젊은 부모들의 남한사회 초기 적응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임통일 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상의 법적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호적문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334호. 대한변호사협회
	전우택 외	남한 내 탈북자들의 3년 추적조사(11): 의식 및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2004. 6. 25.
	전효관	북한인의 심성구조에 대한 메타분석: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며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정병호	탈북난민의 탈정치적 해법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조용관	북한정치교육의 내면화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채정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관리방안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발표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2004	채정민 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 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정진웅	탈북 청소년 적응교육의 방향모색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정향진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연구: 감정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2002-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과제 연구결과발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4. 저서(단독, 공저)

발표 년도	연구자	연구제목	출처 및 발행기관
1995	이영선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오름
2000	민성길	통일과 남북 청소년	연세대 출판부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오름
2001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2002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연세대 출판부
	윤여상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남한생활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세명
2003	김태현 노치영	재중(在中)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도서출판 하우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헌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 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1, No. 1 (2002)	8,5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1, No. 2 (200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헌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